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2. 2

국토교통부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적절성 및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반영 유도

- 난이도 평가항목에 상위정책(국정과제, 업무계획 등)과 연계 정도, 결과 성격의 성과지표 설정 등을 반영하여 지표의 적절성 및 대표성 강화
- 세부평가기준에 자평위원·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성과지표 개선회의 여부, 사회적 가치실현 성과지표 설정 여부 등 반영

☐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만족도 평가 반영

- 정책 수혜자인 일반국민 및 전문가 등 1,437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계획 관리과제에 대해 정책만족도 조사 실시

* 일반국민: 1,082명 / 전문가(학계, 연구원, 공공기관 등): 355명

** 용역기간: '21.11.19 ~ '21.12.19

-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목표 달성도(성과지표의 달성도, 정책효과 발생 정도, 정책만족도) 배점을 60점('19년 35점)으로 설정

☐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자체평가 체계 운영

- 연말평가(노력도, 달성도)시 관리과제 정량지표* 실적에 대해 내부 감사관실, 외부 위원회 등을 통해 중복 검증하여 객관성 제고

* 계획이행의 충실성(추진계획의 기한 내 완료여부), 성과지표의 달성도

- 성과관리과제 수립 체계를 과 단위가 아닌 정책관급 단위로 운영하여, 핵심정책 위주의 관리과제 구성·추진 및 정책성과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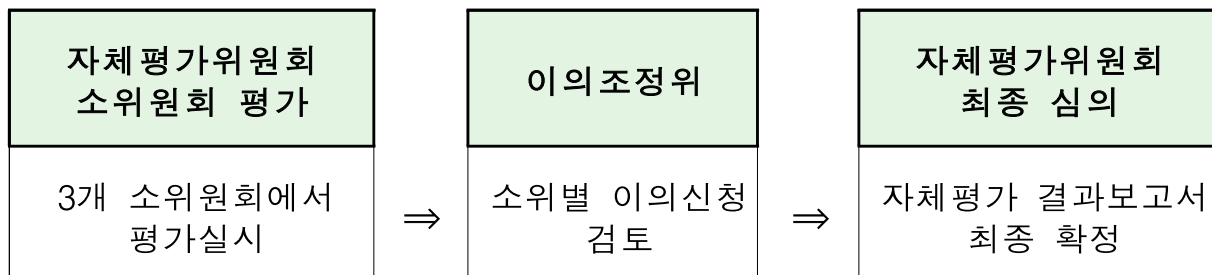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및 '21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조실)에 따라 자평위 구성·운영
 -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3개 소위원회, 23명)
 - 각 소위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이의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소위별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조정

□ 평가방법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인 평가 실시
 - 과제 난이도 평가('21.7)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21.7) → 과제 이행 노력도 및 과제 목표 달성도 평가('21.12~'22.1)
- 평가 종료 후에는 과제담당부서의 평가항목별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조정위(각 소위원장 등)에서 최종적으로 조정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결과를 심의·확정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2021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 총 39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측정기준)	배점 (100)		비고
과제 난이도	○ 계획수립의 적절성	· 정량화·결과성격의 대표성을 가진 성과지표 발굴 정도 (내외부 참여 검토회의 여부)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반영 여부 (추진계획 및 지표 반영 여부) · 사회적가치 실현 지표 가점	10	20	
	○ 성과지표의 난이도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이해관계자 의견대립 정도 · 과제내용의 신규추진여부	10		
과제이행 노력도	○ 계획이행의 충실성	· 계획의 기한내 완료여부	10	20	
	○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 · 여건·상황변화에 대응정도 · 적극대응으로 문제해결 여부	10		
과제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달성도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20	60	
	○ 정책효과 발생 정도	·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 · 정책성과에 대한 홍보효과 감안	30		
	○ 정책만족도	· 일반국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만족도 조사 실시	10		

2. 평가결과

(1) 총 평

- 총 26개 정책관급(122개 과) 中 22개 정책관*(115개 과) 소관 39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직할 등 지원부서 제외

- A등급 2개(5.1%), B등급 6개(15.4%), C등급 6개(15.4%), D등급 11개(28.2%), E등급 6개(15.4%), F등급 6개(15.4%), G등급 2개(5.1%)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관련 부서 수* (BSC 단위부서)	본부 25개 정책관급 (108개 과)	본부 20개 정책관급 (105개 과)	본부 등 22개 정책관급 (115개 과)
과제 개수	46개	39개	39개
지표 개수	178개	180개	207개
성과지표 목표치 평균 달성률	92.13% (14개 지표 미달성)	93.33% (12개 지표 미달성)	90.82% (19개 지표 미달성)
평균 점수(과제)	90.06	90.07	91.65
최대값-최소값(과제)	10.32	14.90	10.01
표준편차	2.87	3.35	2.50

- 우수 과제는 ‘광역거점 중심 철도인프라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지원’ 등이며,
- 미흡 과제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마련’, ‘편리하고 품격 있는 스마트건축 조성’ 등으로 평가됨
- 총 39개의 관리과제의 207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0.82%로
- 188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9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의 주요 원인은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 지연, 코로나-19 등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분석됨
- * 다만, 법령 개정 목표인 경우 법안 국회제출, 소관 상임위 상정 등 지표의 부분 달성에 대해서는 달성 비율에 따라 등급화하여 산정(50~90%)

(2) 주요성과

◆ ‘광역거점 중심 철도인프라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지원’ 등의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① 코로나19 등 위기산업 경쟁력 회복 지원

- (항공)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을 겪는 국적 항공사에게 약 1,500억원(‘21년) 규모의 정책금융 등 유동성 지원
 - 공항시설사용료 및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 영업유지 지원(총 2조 2,094억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 연장(~’22.3)
- (교통) 철저한 교통시설 내 방역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사례 미발생, 버스·택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교통산업 위기극복 지원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OECD 최상위권 달성, PM 제정법률안 및 안전요건 기준 등 마련

② 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

- (스마트시티) 세종 시범도시는 핵심 서비스인 스마트 교통 분야 구축에 착수하고, 부산은 첫 주택단지 입주 등 체감형 성과 창출
 - 스마트 챌린지 사업 2배 이상 확대, 64개 도시에서 교통·환경 등 240개 서비스 실증, 거점도시 4곳을 선정하여 전국 스마트화 촉진
- (철도) 철도 중장기 건설계획, 재원조달방안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21.7), 권역별 지방 광역철도 선도사업 5개 선정(‘21.8)
 - 6개 노선을 개통*하는 등 철도사업을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준고속열차(KTX-이음)도 본격적으로 투입(중앙선, 중부내륙선)
 - * 동대구~영천, 영천~신경주, 신경주~태화강, 태화강~일광, 이천~충주, 임진강~도라산 전철화
- (도로)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21.9)하여 전국 간선도로 확충 및 정비 여건 마련
 -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재정비(7×9→10×10) 및 국내 최장 해저터널 등 주요 간선도로 총 25건(고속도로 1, 일반국도 23, 국지도 1) 개통

(3) 개선·보완 사항

◆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마련’, ‘편리하고 품격 있는 스마트건축 조성’ 등의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① 미래 新성장동력 성과창출 가속화 필요

- 일반건설 현장의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실적 미진,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대가 산정방안, 설계 규제완화 등 지원 要
- 드론 보험 및 사고 관련 통계, 정보 등을 관계기관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연계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디지털 트윈국토, 스마트 건축정책 등 신규 추진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성과 부족, 대국민 성과 홍보 등 활성화 필요

②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및 지역발전 성과 미흡

- 주택 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밀한 주거사다리 구축 확대
-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면적 11.4%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50.4% 거주, 수도권 GRDP 비중 52.5%로 불균형 심화

③ 안전한 일터와 삶터에 대한 국민 우려 지속

-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감소세이나 쏠 산업대비 비중이 여전히 높고, 최근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 고조

* 건설 사망자/전체 산재 사망자: ('17) 52.5% → ('20) 51.9% → ('21) 50.4%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

* OECD 평균 5.2명('19년) vs 우리나라 5.6명('21년 기준)

- 불법건축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불법건축물 감독관 세부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불법건축물 현황: ('18) 206,044건 → ('19) 222,169건 → ('20) 235,291건

(4) 평가결과 종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I.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1.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① 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지방-수도권 상생 추구	E
	② 도시재생뉴딜 체감성과 본격 확산	D
	③ 국가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D
	④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공항건설 추진	D
2. 기존 지역혁신 거점을 활성화한다.		
	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성장기반 마련	E
	②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산업기반 확충	B
3. 국토·도시 분야 탄소 중립,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①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건축물 성능 확보	C
	②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위한 도시정책 추진	E
	③ 디지털·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미래도시 확산	B
	④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마련	G
II.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1. 기술혁신으로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건설 Eng.과 스마트건설기술 시너지를 통한 생산성 혁신	F
	②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확산 기반 마련	C
	③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지원	A

성과 목표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④ 국내 드론산업 육성 및 UAM 도입기반 마련	F
2. 공정문화 정착으로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다.		
	① 건설혁신의 현장 정착을 통해 일자리 질 개선	D
	② 물류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및 안전성 강화	D
	③ 항공전문인력 양성 및 제작산업 지원방안 추진	F
Ⅲ.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1.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한다.		
	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C
	② 공적주택 지속 공급기반 마련	D
2. 속도감 있는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달성한다.		
	① 주택공급 혁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	B
	②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도모 및 거주자 중심 주택 관리	D
3.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①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C
	② 부동산 산업 혁신을 위한 견고한 토대 마련	D
Ⅳ.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1.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① 보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	D
	② 광역거점 중심 철도인프라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A
2.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① 편안한 출퇴근길 조성 및 교통비 부담 완화	C

성과 목표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② 도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 도로 구현	B
3. 교통물류 혁신으로 경제회복을 견인한다.		
	① 미래 모빌리티 육성 및 택시 서비스 제고	D
	② 미래를 선도하는 철도산업발전 기반 마련	F
	③ 자동차시장 변화 대응 및 애프터마켓 육성	E
	④ K-물류 구현 위한 물류산업 혁신 추진	D
V.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수준을 달성한다.		
	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체계 구축	B
	② 안전한 스마트 도로환경 조성	C
2. 첨단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기간교통망을 조성한다.		
	① 디지털뉴딜 기반 철도차량·시설 첨단화 추진	F
	②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철도안전 구현	E
	③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환경 및 항행인프라 구축	E
	④ 예방 중심의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	F
3. 건설 현장 위협요인을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① 건설현장 사망자 감축 및 시설물 선제적 관리·점검	B
	② 편리하고 품격 있는 스마트건축 조성	G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I-1-①	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지방-수도권 상생 추구	E
-------	--------------------------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新균형발전정책) 국토를 수도권 일극→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공간분야* 포함 범부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21.10.14)
 - *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철도·도로·BRT·환승센터 등) 구축 및 교통망 인근에 인재·일자리 유입을 위한 거점(도심융합특구·캠퍼스혁신파크·주거플랫폼 등) 조성
- (광역권계획) 지역주도의 초광역권 발전전략으로서 '초광역권 계획' 도입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 완료('21.6 발의, '22.1 본회의 통과)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우리부 공모('21.8, 12건), 농식품부 연계('21.6, 5건), 균형위 중심 범부처 협업('21.12, 4건) 등 첫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 (지역개발사업) 발전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총 4곳 : 춘천·광주 '21.3, 괴산·나주 '21.9)하고, 사업평가체계 개선*('21.10)
 - * (기존) 중앙주도 + 예산집행 → (개선) 지자체 자율 + 예산집행 및 계획이행, 성과측정 도입
- (교차보전) 1차 시범사업 공모 착수('21.5, 동탄·경남 하동) 후 2차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21.9)하고 공모 진행('21.12)
-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1.10 발표)」 실현을 위해 국토 도시 전반의 중장기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21.12)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주거플랫폼에 대한 지역의 추진의지 반영 및 사업효과 확대를 위해 주거플랫폼 사업을 전국에 확산할 필요
- 지역투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신속 추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타 부처 사업 연계 확대 등으로 주거플랫폼 선정규모 확대
-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독려 및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실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거플랫폼, 투자선도지구, 개발이익 교차보전 등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발굴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주거플랫폼, 교차보전 등 신규 사업을 다수 포함하여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적극 성과 난이도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지역 개발사업 관련 지역 의견수렴,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조속 마련 등 정책추진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94.48%	· 성과지표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하천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목표치 일부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역활력 제고 등의 정책효과 발생, 광역경제·생활권 구축 등 균형발전 기반 마련
3-3. 정책만족도	9.0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도시재생 뉴딜 성과 창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급, 신규사업 선정, 도시문제 해결형 재생사업 등으로 체감성과 창출
 - (뉴딜사업 공급) 사업관리 개선을 통해 생활 SOC 등 도시재생 세부사업 324개, 어울림센터 22개소('21.11월 기준) 등 신속히 완료
 - (신규사업 선정)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1차 13곳(중앙선정), 2차 39곳(시·도 선정), 3차 32곳(중앙선정) 등 신규사업 선정
 - (위험건축물 재생)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여 정비가 시급한 위험 건축물(안전등급 D·E)을 대상으로 정비형 도시재생사업 선정(3곳)
- (노후 주거지 정비) 소규모정비법·도시재생법을 개정('21.7월)하고, 선도 후보지로 소규모관리 20곳,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 선정('21.4월)
- (투자 활성화) 도시재생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도형 리츠에서 탈피, 민간·지자체·기금 협업을 통한 민·관 협력형 리츠사업 추진
 - * 천안 '오룡경기장 철거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서류·발표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완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內 유망한 분야 중소·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 최종 선정
- (교육기반 마련) 적절한 교육 수준 확보로 지역 간 역량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교재 「Zoom In 도시재생」 개발·배포('21.8)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매월 밀착사업관리를 통해 연내 100곳 이상의 사업을 완료하고, 생활 SOC 확충 및 상권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생활 SOC 준공개수, 어울림센터 준공개수 등 정량성격의 성과지표 적절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이해관계자 대립정도와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역활력 제고 등의 정책효과 발생, 광역경제·생활권 구축 등 균형발전 기반 마련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생활 SOC 등 도시재생 세부사업, 어울림센터 등 당초 공급목표 초과 달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선정,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방안 마련 등 도시활력 제고 기여
3-3. 정책만족도	8.9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SOC 투자 확대) 노후 인프라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 확대(안전 예산 '21년 5.8조원→'22년 6.0조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신속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본격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사업 착공 등 신속 추진(15개 사업, '21년 4,007억→'22년 8,095억원)
- (혁신성장) 코로나 19 및 메가트랜드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육성 지원
 - 2050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 혁신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미래 유망주 기업을 발굴하고 고속성장 기업 육성
 - 부가가치 높은 데이터 개방, 선도사업 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지원, 해킹 취약점 사전 제거 조치 등 주요 SOC인프라 안전 관리
- (국제협력) 전세계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相生협력 추진
 - 포스트 코로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국제공조 및 다자협력 강화, 메가 FTA 논의 과정에서 국토교통 분야 협상 조기 타결 등 성과 창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SOC 투자) 효과성 증대를 위해 중장기적 아젠다인 탄소중립, 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에 선제 대응하는 투자 전략도 검토 필요
- (디지털정부 성과관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 안내·교육 및 사업별 발주예정 1개월 전부터 사전협의 계획 모니터링 등 관리강화
- (기업 지원) 기업 성장단계 및 산업분야별 맞춤형 지원 수단의 제한 및 산업 구성원-유관기관 간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정책간 시너지효과 저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정상 추진건수 등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 정책개선 의지 및 정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S	·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 지자체 의견수렴 등 각계 투자소요 적극 확인 및 장래 투자방향 모색 등 대응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S	· SOC 투자 확대노력을 통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지원, SOC의 급격한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 시설유지·관리 기반 조성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8.7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신공항 건설 및 기존공항 이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타 용역 착수(5.21),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9.17)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 보완요구(환경부)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 수차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재보완서 제출(‘21.6)
- 울릉공항 터널공사 굴착(‘21.7) 및 케이슨 제작(2함 제작 완료, 2함 제작 중),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안) 마련 및 재해영향성 검토(행안부) 완료(‘21.12)
- 대구공항 民·軍공항 이전 용역, 우리부 주관 실무협의체 등 통해 민항기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시설규모 및 배치 등을 협의
- 인천공항 제4활주로 조기운영(‘21.6), 대구 터미널 리모델링, 제주 관제탑 신축 등 추진(‘21.12), 백령·서산공항 예타 대상사업 선정(11.3)
- (공항 혁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마련·발표(‘21.9), 공항수요 예측 개선 연구용역 추진(‘21.12), 공항 분야 미래비전 2040 과제 발굴
- 폴란드 신공항 관련 양국 정부 간 MOU 체결(‘21.2·12), 해외공항 개발 추진 협의회(‘21.6) 등을 통해 적극적 수주지원
- 이에 기반하여 페루 친체로 신공항 건설*, 라오스 루앙프라방 공항 FS 사업(‘21.5), 인니 바탐공항 PPP사업(‘21.12) 수주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 대한민국 인프라 분야 최초 G2G 계약으로, 이후 우리 기업(현대건설)의 부지조성 및 본공사 시공사업 수주(‘21.3·7) 등 후속성으로 연결(‘21.11 착공식 개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공항 건설, 기존공항 시설개선 등 개발사업에 대한 부처 간 이견 및 환경단체 반발 등 갈등의 입체적인 관리로 정책 추진동력 확보 필요
- * 제주2공항 보완가능성 검토, 친환경 공항 건설 지침 및 탄소중립 공항 로드맵 마련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상위 업무계획 충실히 반영, 신공항 건설사업, 해외공항사업 등 대표성 있는 과제 발굴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가덕도 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이해관계 대립 정도와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88.1%	· 공항 주변개발 연계 시범공항 선정 지연, 대구 공항 민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연기 등 일부 과제 일정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탄소중립 2050에 따른 공항분야 최초 친환경 공항 건설지침 선제적 마련 등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및 추진단 구성·운영 차질없이 추진, 인천 공항 제4활주로 조기운영 개시 등 이용객 편의 향상
3-3. 정책만족도	8.07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신설 공공기관 입지타당성 심사제 도입) 우선입지 쟁점(혁신도시vs비수도권) 대립으로 세 차례 논의 끝에 여·야 합의 도출하여 군특법 개정(12.2)
- (기상청+3개 공공기관 이전) 기상청 이전계획 수립(10.13) 및 연내 이전 착수('21.12, 1단계), 3개 공공기관 「혁신도시법」상 이전공공기관 지정
- (클러스터 활성화) 장기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충북 산·학·연 클러스터에 도첨산단 조성을 위한 용도변경(10.13, 균형위),
 - 중기부 협의하여 경북 혁신도시를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7.1), 입주업종 제한 완화(10.13, 균형위) 및 사무공간 임대료 지원
 - 혁신융합캠퍼스(정부안 24.5억원), 혁신공유오피스(정부안 18.7억원) 신규예산 확보
- (지역균형 뉴딜) 범정부 TF(전체 6.28, 10.13/권역별 수시) 구성·운영, 혁신도시별 지역발전계획 반영('21.2) ➡ 공공기관 선도 10대 협업과제 추진
- (지역인재 양성·채용) 공공기관-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 - 의무채용('20년 24%→'21년 27%) - 실무교육 전 주기 지원
 - 울산-경남 간 채용범위 광역화 MOU 체결(7.14), 취업컨설팅 제공을 위한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오픈캠퍼스 확대('20년 38개 → '21년 45개)
- (정주여건) 복합혁신센터 건립(원주 '21.1 완공 /대구 '21.3 부산 '21.11 착공),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도입을 위한 신규예산 확보('22년 정부안 10.6억)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충북혁신도시 도첨산단 지정) 공동주택 규모 조정문제 등 관계기관(음성군·산업입지정책과) 협의 장기화로 인한 도첨산단 지정 지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충북 도첨산단) 공동주택 비율 축소 또는 사업방식 변경 등 별도 추진 검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혁신도시 입주기업, 지역인재 채용률 등 정량 성격의 성과지표 적절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지역인재 채용률 등 이해관계자의 정책개선 의지가 높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7.5%	· 대부분 과제를 적기 완료하였으나, 충북 혁신도시 비즈파크 조성 등 일부 과제 일정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MOU, 지역 균형 뉴딜 사업 추진 등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신설공공기관 비수도권 입지 원칙 정립, 혁신도시 내실화 등으로 균형발전 견인 효과 기대
3-3. 정책만족도	9.09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도심융합특구) 금년 선도사업지 2곳을 추가 선정(대전 '21.3, 부산 '21.11), 광주('21.6)·대구('21.7)·대전('21.11)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발의(5.31), '범정부 종합 지원방안' 마련(9.30)
- (새만금) 그린뉴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21.2, 총리 주재 새만금위), 육상태양광 3곳(300MW) 모두 착공(1구역 '20.12, 2·3구역 '21.4)
 - 창업클러스터 사업 착수 등을 위한 사업협약 체결(SK, '21.4), 에너지 자립 기반의 스마트그린 산단 종합계획 수립('21.11)
- (행복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선정(2.8) 및 부지조성 착공(5.24),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法 4.16, 영 6.22)
 - 중기부 이전('21.7),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21.10) 등 추진, 특별관리구역 제도 도입(法 개정, 3.16) 및 구역 지정(4.16)
- (캠퍼스혁신파크) 신규 선도사업지 2곳(경북대, 전남대) 선정 완료('21.4), 기업('23년 입주개시)지원 등 중장기 추진전략 선제적 마련('21.12예정)
- (산단 대개조) 신규 사업지로 5곳을 선정하고, 기존 사업지(5곳, '20년 선정)는 노후산단 지원방식을 대전환한 '경쟁력강화지구'로 지정('21.3)
- (규제혁신) 산단 내 스마트양식장 입주허용(산업법시행령 개정, '21.6), 임대전용산단 기업부담 완화(지침 개정, '21.7) 등 규제개선(총 4건)
-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 최초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21.6), 정비 계획의 핵심과제인 「공업 물량 개편방안」('21.3)도 신속히 마련
 - (공업물량) 수도권 개별공장 입지와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총량은 축소, 계획입지 물량은 확대하는 공업 관리체계 마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韓-UNESCO 간 협정체결식 추진 준비 중('22.3월 예정, 일정조율 중)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도심융합특구, 새만금, 행복도시 등 대표성 있고 구체성 있는 지표 설정, 상위 업무계획 및 국정과제 등 충실히 반영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의 대립정도, 정책 개선의지 등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7%	· 대부분의 과제를 적기 완료하였으나 행복도시 UNESCO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설립 협정체결 등 일부 미달성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도심융합특구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 등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새만금 SK컨소시엄 2.1조원 투자협약 체결 등 지역 일자리 거점 육성 효과 우수
3-3. 정책만족도	9.23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6.3, 현조회의)
- (제로에너지건축) ZEB 인증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인증기관을 신규 지정(11.2)하고 소규모건축물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령 개정(8.23)
- (그린리모델링)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896동을 선정하여 진행, 지역거점 플랫폼 구성·운영(‘21.1~)
- (건축물 안전) 품질인정자재의 정보주체 단계별(생산자, 유통자 등) 건축자재 이력관리체계 구축·운영방안 마련(9.29)
- 샌드위치패널 화재성능기준 강화(준불연 이상) 및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21.2), 빌딩풍 저감방안 및 풍동실험 표준 매뉴얼 마련(‘21.11)
- (관리기반 내실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폭 확대*하고, 초기운영 비용 지원 예산 최초 확보, 기준인건비 추가확보 등 운영 여건 강화
- (안전 사각지대 해소)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6.9) 재발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8.10)하고, 후속 법안 발의(9.1~2)
- 해체공사 관련 상주감리 배치기준 및 착공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7.27)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10.28)
- 광주 붕괴사고에 따른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감리자의 하도급 관리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9.1)
- (방치건축물) 10년 이상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 의무화, 철거비 지원, 정비특례 확대 등 법 개정(3.16),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촉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참여유인 추가 확보 등 개선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그린리모델링 선도사업 준공개소수 등 정량지표 충실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사업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에서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5%	· 대부분 과제를 적기 이행하였으나 공공지정 감리 확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등 일부 과제 미달성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녹색건축 민관합동 TF, ZEB 혁신 TF 등 정책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96.21%	· 성과지표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지역건축안전 센터 설치 개수 등 일부 목표치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제로에너지건축 인증건수 증가 등 건축부문 탄소중립 달성 기대
3-3. 정책만족도	9.64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용산공원 조성) 既개방한 장교숙소 5단지('20.7~)에 이어 부분반환된 부지('20.12)를 보안상 필요 조치 후 추가 개방, 기본계획 변경('21.12)
 - 부지반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용산공원 전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용산공원 관리센터) 설립방안 마련
- (탄소중립 도시) 도시계획 단계에서 탄소중립요소를 고려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21.12)
 -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24~)하고, 인센티브(용적률) 확대('21.7)
 -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탄소흡수원(도시숲, 생활숲)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21.12)
-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 지자체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GB 불법행위 관리대장을 통합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21.10)
 - 환경부, 전문기관 등 협의체를 구성('21.4~6)하여, 환경평가등급 산정 기준을 보완하고 등급 전면갱신('21.8), '해제불가 등급' 신설('21.1)
- (장기미집행 공원) 장기미집행공원 발생 방지를 위해 초기 계획단계부터 조성 가능성 등을 검토·반영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21.4)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공원부지 매입지원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 이자 지원, LH 토지은행을 활용한 공원 부지를 확보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美측과의 이견으로 용산공원 기지반환 및 전면개방 지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美측과 지속 협의, 이견 조율을 통해 온전한 기지반환 및 용산공원 조성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면적 등 정량화 가능한 지표 충실히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탄소흡수원 설치 활성화 위한 도시공원법령 개정 등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용산공원 명칭선정 및 국민참여 프로그램 등 정책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추진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용산공원 조성, 그린벨트 고도화 및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개선 등 시민친화 녹지공간 조성 기여
3-3. 정책만족도	10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가지범도시) 세종 시범도시는 핵심 서비스인 스마트교통 분야 구축에 착수하고, 부산은 첫 주택단지 입주 등 체감형 성과 창출
 - (세종) 8개 스마트 교통서비스(자율주행, 통합모빌리티 등) 구축에 착수('21.1), 혁신서비스 실증·체험관인 세종 퍼스트타운 착공('21.3)
 - (부산) 다양한 혁신기술의 실증·체험 리빙랩으로 운영될 부산 스마트빌리지를 조성하고, 주민 입주 추진('21.12.16 입주 시작)
- (전국 도시 스마트화 촉진) 스마트 챌린지 사업규모 2배 이상 확대, 64개 도시에서 교통·환경 등 240개 서비스가 실증중
 - 전국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거점도시 중심의 확산모델을 마련('21.11)하고, 공모를 통해 4곳 선정('21.12)
- (도시운영체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플랫폼」 보급 추진, 전국 보급방안 마련('21.11)
 - 108개 지자체에 既보급한 통합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부처 협업을 통해 안전·시설관리** 등 연계서비스 발굴(2건)
- (해외수출 확대) 「K-City Network」 국제공모('21.2~4)를 통해 11개 사업 선정('21.6),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개최('21.9)
- (산업기반 강화) 스마트도시법령 개정('21.6)을 통해 혁신 기술 및 서비스 실증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 확대 시행
- (수소도시) 수소시범도시(안산, 울산, 전주·완주)에 수소배관망 및 연료 전지, 통합관리센터 등 수소인프라 구축 본격 착수('21.3~)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소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성을 위해 수소도시 계획 수립, 입지 특례 등 각종 지원 등에 관한 법적기반 조속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국정과제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컨설팅 횟수 등 정량지표 다수 발굴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국가시범도시, 수소도시 조성 등 이해관계자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의지가 높은 적극적 목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5%	· 대부분 과제를 적기 완료하였으나, 수소도시법 제정 등 일부 과제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정책현장의 충실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확산방향 마련, 수요응답형 버스 등 스마트 서비스 차질없이 도입
3-1. 성과지표 달성도	99.25%	· 성과지표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수소도시법 제정 등 일부 과제 지연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스마트화 도시 확산,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미래도시 조성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9.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기반 마련)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디지털 트윈국토 로드맵 수립, 행정서비스 모델 개발, 공간정보 보호·활용 제도개선 등 추진
- (지하정보 고도화) 전국 市(85개)·郡(77개) 상·하수도 전산화 완료('21년 24개 郡), 전국 市로 '3D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확대('21년 33개 市)
 - * 상하수도·전력·가스·지반 등 15종 정보 통합지도 →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 활용
- (국토위성 발사 등) 1호는 발사('21.3) 및 검보정(~'21.10)을 거쳐 본격 운영 중이며, 2호는 '22년 하반기에 발사하기 위해 위성체 시험 진행 중
- (산업계 접근성 확대)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공공복리 또는 연구 목적으로만 제공되나, 보안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공간정보사업자 등에게 사업목적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21.3.16)
- (데이터 연계·관리 강화) 공공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개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연계되는 기관 및 시스템 확대('21.7)
- (기본계획 수립)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개선 및 보완 논의, 중간보고회(9.10), 의견수렴 및 정책과제 아이디어 공모(9.30~10.31)
- (우수 창업기업 지원) 공간정보 기반 창업기업(10개) 대상으로 사업진행 상황과 역량을 진단·분석하여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총 50회, 100H)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하공간통합지도와 정밀도로지도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므로 조속히 구축 완료하고 최신 정보로 갱신하여 서비스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디지털 트윈 국토 교육프로그램 등 대표성 있는 지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지자체수 대폭 상향 등 적극적 목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8.9%	· 대부분 과제를 적기 완료하였으나, 제3차 공간 정보산업진흥계획 등 일부과제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산업계 간담회를 거친 정밀도로지도 구축방안 수립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정책추진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마련,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확대 등 기대
3-3. 정책만족도	9.3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PM 도입)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관리하는 Eng. 전문가 조직인 PM을 국내 도입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시범사업 수행('21.9~)
- (기술형 입찰 확대) 대형일반공사, 리모델링 등도 턴키발주 가능하도록 심의기준 개정('21.6), 기술 중심 기술형입찰 확대('20년 7.5%→'21년 10%)
- (Eng 업무환경 개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적정 공사비 신뢰성 강화, 가격변동 심한 주요관리 공종 집중 관리('21.3~) 체계 구축
 - 쏘 발주자(공공·민간)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건진법 개정, '21.3)를 부여하고 공사기간 산정 운영기준(고시) 마련('21.9)
- (스마트 건설)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 지침을 제정('21.12)하고, 현장 활용성 높은 기술의 적용을 위한 측량 등의 기준 정비('21.12)
- (건설기준 디지털화) 교량분야 건설기준 디지털화 시범사업('21.11) 수행 및 우리부 소관 건설기준 디지털화 5개년 계획 수립('21.11)
- (BIM 시범사업) BIM 로드맵 수립에 따른 시공, 유지관리,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BIM+턴키 시범사업을 지정('21.6, 4건) 추진
- (산업육성) 스마트건설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2센터 건립, '21.5~'22.4)하고, 미입주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건설 전반에 걸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등 체감성과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상용화 지원 및 중장기 스마트건설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기술형 입찰 발주금액 등 대표성 있고 정량 성격의 성과지표로 적절히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기술형 입찰 발주금액 등 다소 높은 적극적 목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적정비용 상시 모니터링, 스마트 건설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등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스마트 턴키, 공공PM 등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혁신 기반 마련 기대
3-3. 정책만족도	9.53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밀도로지도 국도 11,000km 구축, C-ITS 전국 구축 착수 등 자율차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
- 자율차의 조속한 도입·확산을 위해, '30년까지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규제개선 로드맵 마련
-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서비스 도입을 위한 자율차 분야 최초의 법정계획인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 수립
- 규제특례지구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6개소→7개소)하고, 다양한 서비스(무인청소차, 자율주행 셔틀 등)의 실증을 신규로 착수
- 레벨4 자율차 상용화에 필요한 차량, 통신, 인프라 등 제반기술 개발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1.1조원 범부처 R&D 착수
- 임시운행허가 규제개선('21.3, 허가소요시간 수개월→1개월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자율차 기술개발 규모를 지속 확대

⇒ 법·제도, 인프라 기반 마련, 실증사업 활성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22년말 레벨3 자율차 출시 가시화(현대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2년부터 본격적으로 레벨3 자율차 출시될 전망임에 따라, 이의 보급·확산을 위한 국민 수용성 제고 등의 정책 지속 필요
- 자율차 상용화에 필수적인 자율주행 인프라(C-ITS, 정밀도로지도)도 '25년까지 전국 주요도로망에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 충실히 반영,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실증 등 대표성 있는 과제 및 정량지표로 적절히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증운행 수 증가 등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8%	· 추진계획상의 일정 대부분 적기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마련 공청회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여건변화 대응 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레벨3 자율차 출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임시운행건수 증가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
3-3. 정책만족도	9.4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고용안정) '21년 3월말 종료되는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 연장(~'22.3) 완료('21.3), 유급휴직 지원금 지원기간 2차례 연장(총 120일)
 - 취업준비생에게 다양한 항공일자리 정보와 기업·직무분야 소개를 통해 진로선택을 지원하는 '항공일자리 정보박람회'(11.22~30) 실시(23,902명 참여)
- (정책금융 등 유동성 지원)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을 겪는 국적사에게 약 1,500억원('21년) 지원
 - 착륙료·정류료·계류장사용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및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업계 영업유지 지원
 - * '20.3부터 ~'21.10까지 사용료(임대료) 감면·납부유예 ⇒ 총 2조 2,094억원 지원
- (항공노선 복원) 항공수요 회복 촉진 및 여행갈증 해소를 위해 사이판(7.24) 및 싱가포르(11.15) 트래블버블 등 적극적인 국제노선 복원 추진
- (K-방역) 인천공항 코로나19 신속검사 개설(3.1) 및 기관장 노력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 세계 'COVID-19 방역 우수 공항상'(21.8) 등 수상
- (백신수송 규제개선)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절차(최대 3일소요)를 면제하여 행정 불편 해소 및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21.3)
- (항공조합) 항공산업의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 및 자생적 발전 유도를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방안' 마련(9.30) 및 항공사업법 개정
- (MRO 활성화) 해외정비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MRO 물량 확대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항공MRO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8.12, 경제중대본)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인천공항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관련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인천공항 시스템 설계변경('21.10) 및 시스템 시범구축(~'22.12) 지연

* 법무부 정보 연계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기반 자체시스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항공 산업 지원방안, 국제항공 네트워크 정상화 등 대표성 있는 과제 및 정량지표 적절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코로나19 등 열악한 정책환경에도 불구하고 고용 유지방안 등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6%	· 대부분 과제를 적기 이행하였으나,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 등 일부과제 지연 달성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한 항공·면세·여행업계 간담회, 트래블 버블 관련 현지 의견 수렴 등 여건변화에 대한 정책 추진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국제항공선 점진적 복원, 트래블 버블 시행 등으로 항공산업 위기 극복 및 재도약 지원
3-3. 정책만족도	8.99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로 최초 지정 완료('21.2)
- (드론배송 상용화) 국내 최초로 드론 활용 해상 물품배송을 시작('21.2~)하고, 도심 내 드론 활용 피자배송 서비스('21.8)도 개시
- (유망모델 발굴) 글로벌 선두주자가 없는 드론 활용시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21.12, 관계부처 합동)
- (국산드론 구매 지원) 드론전문 누리집인 드론정보포털 운영('21.3~), 발주기관의 드론 구매과정 지원을 위한 평가단 구성('21.8)
- (인프라 구축) 수도권 드론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비행시험, 기체성능 테스트가 가능한 전용비행시험장 추가 구축(화성, '21.7)
- (조종인력 양성) 공공분야의 드론 도입·활용 촉진을 위해 현장 맞춤형 임무특화교육을 확대하고, 신규 교육커리큘럼도 개발
- (UAM)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핵심기술 확보, 상용화 서비스 운용전략 등을 포함한 기술로드맵('21.3) 및 운용개념서 발표('21.9)
- (드론교통관리) 드론 안전성·활용도 향상 및 사업영역 확장 지원을 위한 K-드론시스템(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 실증사업 추진('21.6~)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20.7월 건축착공 이후 역대 최장기 장마('20.7~8월), 철근 수급 불가('21.5~7월), 레미콘 업계파업('21.6~8월) 등 외부 악재의 발생으로 드론 비행시험장 건축공사 지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지연 최소화(~'22.4) 추진

* 동절기 보온대책을 적용한 건축 진행, 사전 자재구매를 통해 지연일정 최소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정량지표·결과지표 위주의 성과지표 적절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운영 관련 이해관계 대립 등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5.6%	· 대부분 과제를 적기 이행하였으나 인천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건축공사 준공 등 일부 과제 일정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책 추진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국내 드론시장 규모 확대, 판로개척 지원 등 미래 항공산업 육성기반 마련 기대
3-3. 정책만족도	9.0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건설산업 혁신) 종합공사 참여 시 다수 업종 등록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물업을 제외한 28개 전문업종을 14개로 대업종화
 -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업계 등 협의를 거쳐 ‘업종전환 세부기준’ 마련·고시(‘21.7)
 - 유지보수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신축 실적’과 구분하여 키스콘이 통합적으로 관리
- (일자리질 개선) 건설기능인의 체계적 경력관리 및 고용지원을 위해 경력, 자격 등을 반영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기능등급제 시행(‘21.5)
 -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당초 발주자가 정한 금액이상 지급하는 적정임금제 도입 발표(‘21.6), 시범사업 추진
 -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대책(‘20.5)에 따라 대금지급시스템 기능 개선(‘21.1), 확산방안 마련(‘21.11)
- (공정산업 쇄신) 3진아웃제 확대, 직접시공 확대방안 마련 등 하도급 관리 강화(‘21.8)를 위한 법령 개정, 공제조합 혁신 추진
 -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 및 등록말소 등 조치
- (생산기반 안정화) 도심골재 생산량 규제 완화, 생산시설의 입지 제한 완화, 통합 정보체계 구축 등 골재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21.6)
 -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21.6), 사고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추진(건기법 개정안 발의, ‘21.2)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십년 이어진 낡은 건설 생산구조가 전면 개선되는 점을 감안, 기존 체계에 익숙한 업계, 발주기관 등 혼란이 없도록 지원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비율, 임금직불제 노무비 지급률 등 정량지표 위주로 적절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적정임금 지급, 임금채불 근절 등 이해관계자 대립정도가 높은 적극적 목표치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7.5%	· 대부분 과제를 적기 완료하였으나, 상습 채불 업체 공표 강화 관련 법률개정 일부 지연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기능등급제 관련 노사민정 TF 개최,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 등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98.25%	· 성과지표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적정임금제 도입 관련 법률개정 일부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업역개편, 기능등급제 시행, 임금 채불규모 감소 등 건설산업 혁신 기반 마련 기대
3-3. 정책만족도	9.46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불공정·불합리 관행 혁파) 화물연대, 화물연합회 등 관련기관과 상생협력 T/F회의 5회 개최 → 친환경화물차 교체 확대방안 마련
- 대기업의 물류일감이 외부에 개방되어 공정하게 거래되도록 물류 거래 환경개선 및 상생협력 실천 선언(7.8),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마련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을 차단하고, 현장 단속 확대 및 부정수급자 행정제재 강화 등 부정수급 맞춤형 방지 대책 마련('21.6)
-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안전운임위원회를 30차례 이상 개최하여 '22년 안전운임을 공표('21.12), 추가적인 운임협상 지속 추진 중
- 안전운임 일몰 이후 제도 운영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시행방안 추진('22년 上)
- (생활물류 종사자 보호) 택배업계 내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1차 사회적 합의(1.21) 후 연구용역('21.2) 착수하여 2차 사회적 합의('21.6)를 통해 택배 가격·거래구조 개선 로드맵 마련('21.6)
- 대형화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단가 후려치기 및 백마진 근절 등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8.31)
-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명시, 적정 작업조건 및 갑질 등 불공정행위 금지 등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21.7), 소화물배송 대행업 인증제 도입
- (화물차 안전) 노후 화물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종합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을 제한토록 하는 제도개선 완료('21.4)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향후 안전운임제 운영 방향 수립 관련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제도 운영방향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선, 택배 표준계약서 마련 등 대표성 있는 과제 중심 적절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화물차 안전운임제, 택배가격 거래구조 개선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가 높은 적극적 목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8.8%	· 대부분 과제를 적기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화물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동영상 공모전 등 일부 과제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안전운임제 관련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회의 등 개최 등 여건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94.38%	· 성과지표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의 참여한 대립 등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선 개정안 처리 등 일부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확대 등 추진
3-3. 정책만족도	8.63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전문인력 양성)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항공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코로나시대 항공사 맞춤형 인력양성방안 마련을 추진
 - (심포지엄 개최) 항공교육훈련 방향과 미래 교육훈련 방안을 논의하는 “제4회 아시아 항공교육훈련 심포지엄” 개최(6.2, 48개국 490여명 참석)
- (항공 소·부·장 사업지원) 기술력을 가진 국내 부품기업이 인증 문제 등으로 소·부·장 사업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적극 지원
- (글로벌 영향력 확대) 국가브랜드 항공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국제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영향력 강화
 - (KAA 설립추진) 우리부·공항공사·교통공단에 산재된 교육과정을 통합,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한국항공아카데미(KAA) 설립방안 마련(2월)
 - (ICAO 고위급 회의 참여) 항공회복 촉진을 위해 항공산업의 재정 지원,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완화 등 각료선언문 채택 및 신기술 도입
 - 우리나라 제출 안전(5건)에 대한 ICAO 권고안 채택 등의 성과 달성
 - (국제회의) 한·유럽 지식교류협력강화회의(3월), APEC 교통실무그룹회의(3월), ICAO 아태지역 항공안전팀(APRAST) 회의(3월), ICAO 아태지역 웨비나(4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항공 채용시장 불안정에 따라 신규채용 감소 등이 지속되어 조종인력 양성사업 추진에 애로 발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회복 단계별 조종인력 수요예측을 통해 향후 조종사 채용 등을 고려한 조종인력 양성사업 추진방향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설립, 헬기부품 국산화 촉진 건수 등 대표성 있는 과제 발굴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자수 등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2.3%	· 대부분 과제를 적기 완료하였으나 항공인력양성 사업 개선방안 마련 등 일부 과제 일정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항공교육훈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추진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98.75%	· 성과지표의 대부분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항공전문인력 양성 및 제작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항공안전 관련 해외진출 등 기대
3-3. 정책만족도	8.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운영체계 전면개편) 기존 유형(영구·국민·행복)별 칸막이를 해소한 통합 임대 전면도입을 위한 입주자격 등 제도 완비('21.4, 공특법 시행규칙 등 개정)
 - 입주자격(최대 중위소득 130%→150% 이하) 단일화, 소득연계형 임대료 도입, '21년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곳, 4,100호 사업승인('21.12)
- (품질개선) 3기 신도시 내 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입지 확보, 평형 확대(60~85m²) 및 마감재 개선, 생활SOC 복합 설치 등 개선
- (그린리모델링) '20년 시범사업 1만호를 대폭 확대하여 노후 영구 임대주택 세대통합 등 총 8.3만호 그린리모델링 추진
- (공공자가주택) 무주택자가 자신의 소득·자산 등 상황에 맞춰 자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 설계·도입 발표(2.4대책)
- (테마형 매입임대) 민간 사업자 대상 테마별 주거·공유공간을 갖춘 신축 주택의 건축~운영을 위탁하는 테마형 매입임대 신규 도입(1천호 공모)
- (코로나19 위기가구)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보증금 부담 완화(전세임대 5%→2% 등) 등 지원 확대
- (주거급여 확대)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주거취약 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평균지급액 : '20년 15.3만원 → '21년 16.8만원)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이주수요 발굴부터 임대주택 물색, 이주 및 정착까지 전 과정 밀착 지원('20년 5.5천호 → '21년 6천호)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거복지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누수 없는 주거복지 정책 전달을 위해서 주거복지센터 확대방안 검토 필요
 - 운영지원(공간 제공 등) 및 기능강화 방안(법령개정 추진) 등 검토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공공자가주택 제도화, 주거급여 지원가구 등 대표성 있는 과제 설정, 대부분 지표를 정량 지표와 결과지표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2%	· 대부분 과제를 적기 완료하였으나, 관계부처 협의 지연,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통합공공임대 관련 일부과제 일정 지연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입주민 만족도 조사,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반영한 마감재·평형·입지 개선 등 정책현장 의견 수렴 및 여건변화 대응성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99.3%	· 성과지표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일부 목표치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30년만에 유형을 통합한 공공임대 공급 등으로 포용적 주거복지 달성 기대
3-3. 정책만족도	9.06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5만호 지구지정 완료, 3기 신도시(5곳)는 지구계획승인·토지보상 병행 추진 등으로 공급일정을 최대한 단축
 - 지역주민·지자체 등의 참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 7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공공택지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지구계획 승인(주택 공급계획 확정 등) 이후로 앞당겨 현행보다 주택을 1~2년 조기 공급
 - 인천계양·남양주왕숙2, 성남신촌·복정, 인천검단 등 1·2차 사전 청약(1.4만여호) 등 연내 공공분양 약 3만 2천호 사전청약으로 공급
- (도심 주택공급) 8.4대책 신규택지 모두 개발구상(안) 마련 완료,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하반기부터 지구지정 등 인허가절차 착수
 - 특히, 후보지 생활권이 기형성된 도심內 위치하는 점과 지자체·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입지별 특화방안 마련
- (쪽방촌 정비) 쪽방촌(영등포, 대전역) 정비사업의 지구지정('20년) 이후, 지구계획 수립 등 쪽방촌 정비사업 본격화
 - 쪽방주민 중 재정착 희망자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쪽방 주민용 공공주택 입주자격 기준(안) 마련(11월 말)
- (투기 근절) 처벌대상 확대, 강력한 처벌규정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 위법행위는 엄정 처벌하여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 회복
- (설계공모 확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특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등과의 협업 및 설계공모 대상 확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쪽방촌 등 일부 반대 여론이 있는 사업지구에서 갈등관리에 만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국정과제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지구계획 수립, 사전청약 등 결과지표로 적절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신규택지 확보, 쪽방촌 지구지정 등 이해관계자 대립정도가 매우 높은 적극적 목표치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7%	· 대부분 과제를 적기 완료하였으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일부과제 달성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환경영향평가 등 설명회·공청회 진행 등 정책 현장 의견수렴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99.3%	· 성과지표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서울역 쪽방촌 지구지정 지연 등 일부 목표치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연내 완료하였으며, 사전청약 실시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 우수
3-3. 정책만족도	8.67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주택공급 혁신) 3기 신도시, 3080⁺대책 등 주요 사업지 인허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사전청약 등을 통한 조기공급 착수
- (공공택지) 모든 3기 신도시 계획을 확정('25년 입주개시), 과천·태릉지구 및 24대책 신규택지도 구체적인 개발계획 또는 입지 확정
- (사전청약) 공급효과를 최대한 조기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공분양 6.2만호('21~'22)에 더해 민간분양·도심공급 10.7만호 사전청약 추진
 - 공공분양은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등에 총 4차(1차: 7월, 0.4만호, 2차: 10월 1만호, 3차: 11월 0.4만호, 4차: 12월 1.4만호)에 걸쳐 총 3.2만호 공급
 - 민간분양은 1차로 오산세교2(14백호), 평택고덕(6백호), 부산장안(5백호) 25천호 공급, 2차 인천검단(2.7천호), 평택고덕(0.6천호)에 3.3천호 공급
- (도심사업) 3080⁺ 대책 발표('21.2)후 지자체 수시발굴 및 민간 공모(1.8만호, 10.28) 등을 통해 총 168곳, 약 16.9만호 후보지 발굴
 - 지자체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차 예정지구 9곳 1.4만호 지정, 이중 7곳 1만호 본 지구 지정(12.31)
- (공공정비) 3차례 공모를 통해 전국 35곳(서울 29곳, 경기 6곳), 총 3.7만호 규모의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선정(1.15, 3.29, 4.7, 7.16, 10.28)
 - 후보지 중 정비구역 7곳에서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신규 구역은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준비하는 등 사업 본격화
- (통계 신뢰도) 신규표본 활용, 외부전문가 및 관계기관 검증절차를 거쳐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통계품질 및 신뢰성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총 205만호 주택공급 계획 속도제고를 위해 주민·전문가·업계·지자체 등과의 현장소통 노력을 강화하여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 가속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국정과제 등 상위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사업 후보지 발굴 등 대표성 있고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성과지표 적절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민간 분양지원, 사전 청약 등을 통해 과감한 주택분양 물량을 지표로 설정,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 등이 높은 적극적 목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6%	· 대부분 과제를 적기 완료하였으나, 관련법률 개정 지연 등으로 일부과제 달성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8개월간 위클리 브리핑 실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등 정책현장 소통노력 우수, 사전 청약을 민간분양까지 확대 등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총 205만호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 기대
3-3. 정책만족도	8.5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청약)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21.2)·추첨제 도입('21.2),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21.11) 등 제도 개선
- (금융)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로 옮겨갈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 도입('21.9)
 -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시행('21.8),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인하(일반형, 2.0%→1.5%, '21.6) 등을 통해 저금리 맞춤형 주택 금융지원
- (임대차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21.5.31)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첫 시행(6.1~)
- (보증금보호) 보증료를 대폭 할인(HUG 전세금반환보증 등, 70~80%)하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가입 확대 적극 유도
- (분쟁조정)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 설치('21.2~7월, 6개소)하고, 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12월)하여 적극적으로 제도 안내
- (품질향상) 시공 후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사후확인제 도입('22.7.)을 위한 평가방법·성능기준 마련 실태조사('21.6.) 및 법적근거 마련 추진
- (관리강화)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감리자에게 '하도급 자격 검토' 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시행령」,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21.12 완료예정)
- (미래주택) 장수명주택 인증대상 확대(1,000 → 500세대), 공공주도 확산, 기술개발 R&D 등을 포함한 상용화 추진방안 마련('21.8.)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모듈러주택 활성화(주택법), 공동주택 회계감사 강화(공관법) 법안이 국회소위 계류 중으로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지원가구당 주거비 경감액, 보증금 보호 상품 가입실적 등 정량성격의 지표 다수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지원가구당 주거비 경감액 등 예년 대비 적극적인 목표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1%	· 대부분 과제를 적기 완료하였으나, 관련법 개정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일부과제 달성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공동주택 경비원 관련 상생협약식 등 정책현장의견 수렴 노력, 광주 붕괴사고에 따라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기준 개정 등 여건변화 대응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97.4%	· 성과지표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법안 처리 일정 지연으로 인한 일부 법률개정 목표치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특별공급 제도개선을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 청약기회 확대 등 기대
3-3. 정책만족도	8.79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공부문 신뢰 회복) 투기근절을 위한 LH 내부통제 방안 마련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3.14)
 - 정부합동 「투기근절대책」(반부패정책협의회, 3.29)를 통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단계 포괄 투기방지 시스템 구축 발표,
 - 정부합동으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방안」 발표(6.7)
- (시장질서 확립) 「투기근절대책」의 투기방지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법령, 내부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 추진
 - 대책에서 발표한 국토부 소관 12개 법률 개정안 모두 발의완료,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 → 「LH법」, 「공공주택법」 개정(4.1)·시행중
 -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장교란행위 조사·분석을 총괄하는 전담조직 정규화·확대 개편(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4.7)
- (공시가격) 통계 인프라로서 재산세·건보료 등 60여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 추진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을 토대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제고하고 부동산 유형별 불형평성 해소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복지제도 등 영향을 분석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 완화방안을 제도별로 마련
- (택지공급·보상) 토지 등의 수용권 남용방지를 위해 공익사업의 공익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토지보상법 개정(4.13)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개발부담금 상향, 감면사업 정비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 전반에 대한 실효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고할 필요
- 부동산거래조사 전담 조직도 확대하여 교란행위 대응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의심 거래 조사 건수 등 정량지표로 충실히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불공정행위 근절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 정도와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LH혁신방안 마련 등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98.6%	· 성과지표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불공정행위 근절 법제도 개정 일부 지연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부동산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기대
3-3. 정책만족도	8.56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중개보수)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매매·임대차 역전 현상 해소 등 기존 보수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 매매·임대차 역전(8억 거래 시) : (현행) 매매 400만원 < 임대차 640만원<240만원↑>
(개편) 매매 320만원 = 임대차 320만원< 동 일 >

- 확인·설명서의 시설물 확인 강화 및 권리관계 항목 추가 등을 통해 분쟁소지 최소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중개사고 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액 상향,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2→3년)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 (부동산 산업 혁신)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 산업발전 기반 활성화, 및 시장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21.11월)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에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와 기존업계와의 상생 등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
 - 부동산업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육성 창업경진대회 확대 개최('21.2~)
- (부동산산업 질 향상) 상장리츠 지원확대 및 일반국민 투자환경 개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11월)
 - AMC 인가요건 명확화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6월), AMC 경영건전성 기준 및 실태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5월)
 - 부동산개발업체의 공공사업 참여범위 확대 추진을 위한 '부동산개발업 선진화를 위한 육성방안 연구' 실시('20.8~'21.8 부동산개발협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경영실태평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개선으로 인해 리츠업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중개보수 개편방안 마련, 공모리츠 총자산 규모 등 대표성 있는 지표로 적절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공모리츠 자산규모 등 전년대비 목표치를 적극 설정, 중개보수 개편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전문가 자문회의, 소비자단체 TF 등을 운영하며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추진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부동산 거래보수 역전현상 해소, 공모리츠 활성화 등 기대
3-3. 정책만족도	8.4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철도 네트워크) 서울5호선 하남 연장선('21.3, 3.0km), 서울 7호선 석남연장선('21.5, 4.1km) 개통 등 광역·도시철도 네트워크 지속구축
 - (광역철도) 서울 5호선 하남선 전구간 개통('21.3), 별내선·도봉산-옥정·안심-하양 등 광역철도사업 공사 중
 - (도시철도) 서울 7호선 석남연장선 개통('21.5),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21.8), 부산 사상-하단선 등 6개 도시철도사업 공사 중
- (광역·혼잡도로) 계룡 신도안 ~ 대전 세동('21.9) · 동부간선도로('21.12) 개통, 인천 거침도~경기 김포 약암리('21.12) 착공 등 광역도로망 적기 확충
 - 상개~매암('21.2) · 삼화맨션~과정교차로('21.3) 개통, 식만~사상('21.1) · 달서구 상화로('21.12) 착공, '제4차 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 확정·고시('21.7)
- (간선급행버스체계) 3기 신도시, GTX 조기 착공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BRT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수정계획('21.~'30.) 고시('21.11)
 - (BRT 확충) 적극적 사업지원을 통해 부산 서면-충무 BRT 개통('21.12) 및 서면-사상BRT(후속사업) 착공('21.12)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확충
 - (S-BRT 도입) S-BRT 시범사업(인천·부천·성남·창원·세종 등)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착수 등 BRT 고급화 적극 추진
- (주요 거점 환승센터) 환승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도개선 사항, 주요사업 등을 담은 「제3차 환승센터 기본계획」 고시('21.8)
 - GTX 역사 등 주요 환승거점 6곳에 환승센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명지신도시 환승센터 준공('21.4)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조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대표성 있는 추진과제를 충실히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BRT, BTX 사업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 정도와 정책 개선의지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하남선 개통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여건변화에 대응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수도권 접근성 개선, 혼잡도로 개선, 환승편의 향상 등 기대
3-3. 정책만족도	9.91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광역거점 인프라 강화) 철도 중장기 건설계획, 재원조달방안 등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 발표(신규 44개, 58.8조원, 7월)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신규사업에 지방권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
 - * (3차망) 1개 사업, 22.5km, 0.5조원 → (4차망) 11개 사업, 444.3km, 12.1조원
 - 또한 권역별로 지방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선정(5개, 8월)하여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10월), 광역철도 제도개선 방안 마련(12월)
 - *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연장 223km, 사업비 7.6조원
 - 아울러, 6개 노선을 개통*하는 등 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준고속열차(KTX-이음)도 본격적으로 투입(중앙선, 중부내륙선)
 - * 동대구~영천, 영천~신경주, 신경주~태화강, 태화강~일광, 이천~충주, 임진강~도리산 전철화
- (운영·관리 효율화) 철도운영 효율성 및 운영-건설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철도운영전략 세부 추진방안(안)’ 마련(12월)
 - 차량기지 기능 전면 재조정 등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안)’ 마련(12월)
- (서비스 향상) 수도권 출퇴근 편의를 위한 GTX, 신안산선, 신분당선 등 신규노선*의 적기 개통·착공을 위해 사업 적극 추진
 - * (GTX-A, 신안산선, 신분당선 신사~강남) 공사 중, (GTX-B) 재정 기본계획, 민자 RFP 작성 추진, (GTX-C)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추진, (서부권) 사전타당성조사 중
 - 다자녀 등 공공할인 확대, 쏠열차 수어 안내 제공 등 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서비스 발굴, 코로나 대응도 철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철도사업의 경우 착수~준공에 장기간 소요, 지역 민원, 사업지 특성 등에 따라 지연 요소가 발생하나,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적기 개통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제4차 철도망계획 등 국정과제와 업무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표성 있는 추진과제 적절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등 이해관계의 대립과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은 목표치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4%	· 대부분 추진과제를 적기 완료하였으나 기본 계획 고시 등 일부과제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제4차 철도망계획 수립 등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관계기관 면담 등을 수차례 개최하며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제4차 철도망계획 수립으로 국민 이동권 개선, 고용유발 및 경제과급효과 등 기대
3-3. 정책만족도	9.23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광역교통계획 수립) 관계기관·일반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기본계획*('21.10) 및 시행계획**('21.7) 수립

* 향후 20년간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계획 등 제시

** 향후 5년간 광역교통시설 구축 및 제도개선 과제 등 제시

- (광역버스 서비스 확대) 광역버스 노선 신설, 증차운행 지원 등을 통해 운행거리를 확대하고 2층 전기버스 최초 운행으로 이용편의 제고
 - 광역버스 7개 신설노선 운행개시,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등을 통해 광역버스 총 운행거리 20,136km 증가('21.12, 목표대비 183%)
 -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준공영제 확대('21 기준, 총 27개 노선), 2층 광역 전기버스 운행('21.4), 프리미엄 M버스 도입방안 마련('21.9)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평균 대중교통비의 23.6%를 절감(월평균 14,816원, '21.上)하여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 교통비 부담 경감
 - 사업지역을 전국 17개 광역시도(1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작년 대비 이용자 대폭 증가(16.4만명 → 29만명)
 -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알뜰카드('21.7), 충남형 알뜰교통카드('22.1) 등 지자체 교통시책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알뜰교통카드 도입
- (요금 정산분쟁) 수도권 철도기관(11개)간 연락운임('15~'17년분) 정산에 대해 갈등이 지속되어, 대광위 주관으로 조정 결정('21.5)
-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규모 공공주택·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난 완화를 위한 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확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광역교통계획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필요
- 코로나19 등에 따라 지연된 광역버스 확대 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알뜰교통카드 이용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리도록 예산 확대 및 홍보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도시권 광역 교통계획, 알뜰교통카드 등 대표성 높은 추진과제를 성과지표로 적절 선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광역교통 개선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의지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국민참여단 운영 등 정책현장 소통 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이용자 중심 광역교통 서비스 운영 등 국민 교통편의 개선 기대
3-3. 정책만족도	10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코로나19 지원 강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및 노선버스와 의료 인력에 대한 통행료 감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 지원
-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추진) 설계지침과 신규 편익 산정기준 개발 등 사업추진 기반 마련(추진방향 및 안전강화 방안 보고, 9.30)
- (지역 간 이동성 강화를 위한 도로망)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 중 장기 계획을 수립('21.9)하여 간선도로 확충 및 정비 여건 마련
 -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재정비(7×9→10×10) 및 국내 최장 해저터널 등 주요 간선도로 총 25건(고속도로 1, 일반국도 23, 국지도 1) 개통
- (친환경 충전인프라) '22년까지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60기 구축 추진(착수기준), 급속 전기충전기(100~200kW) 221기 구축, 20분내 80%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350kW) 74기 병행 구축
- (대중교통 연계·환승 체계) 고속도로 영업소·휴게소 등을 활용한 거점별 환승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착수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천대교 및 인천공항 민자고속도로 사업 재구조화 추진방안 마련('21.11)
- (지역 맞춤형 관광·편의 인프라) 고속도로 유희부지(582만㎡)에 공원·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제공('21년 24개소)
- (스마트 복합쉼터) '21년 8개소 신규사업 추진('20년 선정 5개 사업 준공), 수려한 디자인 반영 등 지역 랜드마크로 차별화('21.3~)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운전자 증가, 인구 고령화, 기상 악화 등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 증가
 - 사람중심 도로 건설·운영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과 개선사업 적극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도로이용자 편의·안전강화 등 대표성 높은 추진과제를 적절 선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목표치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도로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간담회 수회 개최 등 정책현장 소통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코로나19 관련 통행료 지원, 비대면 통행료 납부 서비스, 도로이용 만족도 상승 등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10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모빌리티 활성화) 관계부처,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모빌리티법」의 국토위 소위 회부 및 공청회 개최('21.12)
- (운송플랫폼)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화 완성을 위한 여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고시 2건 제정완료 후 시행('21.4)
 -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당연직 2인, 민간위원 8인) 출범 및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시 필요한 평가 절차 등 세부 규정 제정('21.5)
 -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 택시 동승(플랫폼 활용)과 법인택시의 복수 가맹 가입 허용을 위한 규제 개선(택시발전법·여객법 개정, '21.7)
- (택시서비스 품질개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불법 촬영 처분 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을 위한 법 개정(여객법 개정, '21.7)
 - 택시 총량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21.11), 전기·수소 택시 도입 활성화를 위한 고시 개정('21.2), 택시 앱미터 제도화('21.8)
- (전세버스 시장 선진화) 종사자 권리보호, 거래구조 투명성 확보, 소비자 보호·안전 관리 등 전세버스 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21.6)
 - 거래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행기록증 항목 구체화 등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21.1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제도 개선('21.7)
- (사업용 수소차 보급 확산) 사업용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21.3)
- (수소교통 복합기지) 수소충전소 기계설비 발주 등을 위한 참여 기관 협약 체결('21.5), 보조금 교부('21.7) 등 정상추진 중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업용 수소차) 수소버스의 보급은 초기 단계이므로 향후 환경부(구매보조금, 충전소 등), 산업부(기술개발), 국토부(연료보조금, 안전 등) 등 각 사업의 연계를 위한 종합 로드맵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국정과제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 대수 등 대표성 있는 정량과제 적절 선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가맹형 브랜드 택시 대수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 정도가 높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6.6%	· 대부분 과제를 적기에 완료하였으나, 법률 통과 지연 등 일부 과제 달성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정책현장 소통을 통한 여건변화 대응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플랫폼을 활용한 운송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기대
3-3. 정책만족도	8.64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탄소중립 추진) 서울시·철도공사와 ‘솔라 레일로드(Solar Railroad)’ MOU 체결(3월) ⇒ 철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25MW) 구축 추진(8월~)
- 디젤차량 감축(△17량)과 친환경 전기차량 EMU 도입(+84량) 외에도 수소열차(1.2MW) 제작 및 예비시험주행(12월) 등 탄소중립 지속 강화
- (산업육성 지원)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안)을 마련(12월)하고, 철도 R&D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착수(6월)하여 산업발전 기반 마련
- R&D 성과 기업 설명회(2월), 우수성과 발표회(6월, 11월) 등을 실시하여 R&D 실용화를 통한 철도산업 육성 지원
- (미래 먹거리) 도전·혁신 연구과제의 기획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과기부 사업)’ 연구테마로 하이퍼튜브 선정(4월)
- (해외수주지원) 국제인증 취득지원(^{20년}12개사→^{21년}25개사), 글로벌 연수과정(^{20년}10개국→^{21년}12개국) 확대, 연수생 DB 구축(6월) 등 완료
- 국가 간 고위급 면담 등으로 국내 철도경쟁력을 홍보하고, 수주자료 연계·관리방안 마련(7월) 및 관계기관 협의체 개최(3회)로 수주 활성화
- (국제협력) 국제철도화물·여객운송협정(SMGS·SMPS) 가입을 본격 추진(외교부에 제출 完)하고, OSJD 활동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 ‘한-러·한-중 협력회의’(11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국제포럼 개최(12월)
- (남북철도) 동해북부선 착공(11월)과 경의선 전철화 개통(11월) 완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외 수주, 미래 기술 개발 등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실현되는 과제로, 정책 추진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장기 로드맵 등에 따라 세부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실제 성과와 연계되도록 지속 관리하고, 추진 정책에 대한 홍보도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철도 R&D, 해외수주 등 대표성 있는 지표 선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코로나19 기간 국제포럼 개최, 수소열차 시험 주행 등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9%	· 대부분 과제를 적기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솔라레일로드 MOU 체결, 철도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등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R&D 상용화 실적 확대, 해외수주 확대 등 철도산업 발전기반 마련 기대
3-3. 정책만족도	8.9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소·전기차 안전기반)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 방안('21.4 혁신성장 빅3회의),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 인력 양성방안 발표('21.8 혁신성장 빅3회의)
 - 전압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진동, 열충격, 과전류 등 평가항목을 추가(7종 → 11종)하여 제작단계에서 안전성 강화('21.5)
 - 판매 전 리콜 대상차량의 시정조치 후 판매 및 구매자에게 고지 의무화('21.4. 법개정), 결함조사 인력·인프라 확충
 - 고전원전기장치(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21.10) 및 검사 매뉴얼 제작('21.12), 전문 정비소 확대를 위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21.10)
- (이륜차 관리)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발표('21.9.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신고-검사-정비-폐차 등 생애주기 관리제도 정비
 - * (신고)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조사 및 사용폐지 유도(6.9~) 및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실시(10.1~, 지자체·경찰청 협조)
 - * (검사) 불법튜닝·주요장치 점검을 위한 안전검사 단계적 도입(대형부터) 추진 및 미수검 이륜차에 대한 검사명령·운행정지·사용폐지 등 관리체계 확립
 - * (정비)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요청(10.19) 및 전문가 타당성 검토(11.4) 등을 거쳐 정비업 도입 검토
 - * (폐차) 既 운영 중인 자동차 폐차장(540여개)을 통한 이륜차 폐차 및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 등 이륜차 폐차제도 도입('21.8, 법 개정안 발의)
- (애프터마켓 육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방안('21.12) 등으로 튜닝 활성화,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관리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 일부 제도개선 과제 지연 등으로 인해 철저한 일정관리 추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국민 안전에 필요한 안전기반 확립을 위한 정책 지속,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 친환경차 검사 인프라 확충 등 대표성 있는 과제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자동차관리법 개정, 리콜 관련 규제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 정도와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2%	· 대부분 추진과제를 적기 완료하였으나, 고시 개정 등 일부과제 달성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장 건의 수립 현장소통을 통한 여건변화 대응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불법 이륜차 단속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중고차 시장 활성화 등 기대
3-3. 정책만족도	9.07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생활물류법) 생활물류 발전 기반 조성 및 종사자·소비자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1.26)
- (e-커머스) 수도권 주요 거점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한국판 뉴딜 핵심과제로 반영하여 후속 절차 차질없이 진행 중
 - (구리) 지자체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21.5)하였고,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22년 말 최종 사업계획 확정 예정
 - (화성·의정부) 관련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예정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중소 물류업체가 공동 활용하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천안) 구축 관련 실시설계 완료('21.11월) 및 착공 추진('22.1월)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을 완비하고, '21.11월 기준 총 18개 인증('21.12 ~ '22.1 2개 추가예정)
- (물류혁신 R&D) 7년간 추진 예정인 13개 과제 중 공동물류, 지하 배송 등 우선과제 8개를 착수('21.4), 이외 5개 과제 세부기획('21.11) 실시
- (K-물류 시범도시) 신도시 개발과 연계 '21년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지원 대상지로 부산 EDC, 송산 GC를 선정하고 물류계획 수립 지원
- (K-물류 실증단지) 기존도시의 물류 효율화 위해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물류서비스 개선하는 스마트 물류 실증단지 지원
- (수소화물차) 수소화물차 출시('22년)에 맞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주요 물류 운송구간에 10톤급 대형 수소화물차 시범운영 실시(12.27)
- (한중 복합운송) 중국상품의 미주 등 수출경로로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韓(인천)-中(위해)간 항만과 공항까지 연계사업 준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생활물류의 체계적 육성·지원과 종사자 보호 등을 위해 택배사업자의 사회적 합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국정과제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등 대표성 있는 정량지표 다수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생활물류법 제정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8%	· 대부분 추진과제를 적기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물류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정책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여건변화 대응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94.95%	· 성과지표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스마트 물류센터 등 일부 과제 달성 지연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제정 등으로 산업 종사자 권리보호 및 소비자 권익 증진 기대
3-3. 정책만족도	9.0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교통 안전) 우리부 주도로 국조실·행안부·경찰청 합동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21.3, 현안조정회의)하여 적극 추진

- ▶ (보행자) 도시부 제한속도 50^{km/h}이하(보호구역 30^{km/h}) 설정(안전속도 5030, '21.4), 스쿨존 등에 대한 보험할증제 신설('21.9), 대국민 홍보 강화
- ▶ (화물차) 상시·현장 단속 전문인력 활용 근거 마련·중대사고 시 형사처벌(교통안전법·화물차법 개정, '21.7), 의무 휴게시간 기준 강화('21.3) 등
- ▶ (버스·택시 등)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여객법 개정, '21.7)하고, 렌터카 명의 대여 시 처벌 신설(1년 이하 징역 등, '21.1)
- ▶ (이륜차) 배달 이륜차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21.7)하고, 교통법규 단속을 위한 공익제보단 확대('20년 2천명 → '21년 5천명)

- (개인형 이동수단) PM을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PM 제정법률안 국회 논의
 -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등 통행방법 정립(도로교통법 개정, '20.12)에 따라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PM의 안전요건 기준 마련('21.5)
 - 이용자·보행자 보호를 위해 법률제정 이전 선제적으로 업계·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공유PM 보험표준안 마련('21.11)
- (교통약자 보호) 공청회, 중앙부처·지자체·장애인단체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마련('21.11)
- (교통환경 개선) 무인로봇,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주차로봇 도입·확산을 위해 주차로봇 관련 설비 등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21.12)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 등 교통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별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국정과제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등 대표성 있는 정량지표 적절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사망자수 감축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교통안전 규제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 정도가 매우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4.8%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청회 일정 지연, 국회 법안 처리 지연 등으로 일부과제 미달성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안전속도 5030 토론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의견수렴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추진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97.55%	· 성과지표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사망자 수 감축 목표 일부 미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보행 사망자수 감소, 음주운전 사망자 수 감소 등 교통안전 제고 기여
3-3. 정책만족도	9.38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실시간 모니터링) 가속도계·GPS·음향센서 등을 IoT 센서와 결합하여 교량·비탈면 위험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착수
- (초동대처 강화) 터널 내 위급상황 발생시 CCTV·진입차단·환류시설 작동 등이 가능한 원격제어체계를 구축하여 2차사고 등 대형피해 예방
- (도로인프라 성능시험장) 재해·재난에 대비, 산사태·낙석·포장 등 설계 공법 체계적 검증에 위한 실규모 국가성능시험장 착공
- (졸음쉼터) 고속도로 14개소·국도 6개소 신규 설치, 여건에 따라 화장실·전기충전소·벤치·파고라·조명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 (가로등 확충) 고속도로 야간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노면상태·교통량 등에 따라 밝기를 자동 조정하는 스마트 가로등 설치 추진('21년 17km)
- (사고취약구간 개선) 도로 기하구조 위험 개선(30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56개소) 등을 통해 사고 발생확률 높은 위험도로 집중 개선
- (보행자 안전) 마을주민 보호구간(60개소), 횡단보도 조명시설(1,066개소), 국도변 보도 설치(37개소)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안전사업 실시
- (디지털 도로망) '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 대비, '25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약 4.8만km) 디지털 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 착수
 - 전국 국도 및 지방도에 ITS(4,140km) 구축('21.12) 및 C-ITS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ITS사업시행지침 등 행정규칙 제·개정 완료(~'21.9)
- (하이패스)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구축('21년 34개소, 누적 66개소), 제한 속도 등 사전안내를 위한 내비게이션(T맵, 카카오내비 등) 안내 실시('21.0~)
 - 3.5m 미만 차로 폭 확장(→4.35m) 35개차로 구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도로시설물의 급속한 노후화에 대비하여 선제적 예방관리 확대 필요
 - 구조물 관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유지·관리 체계로 속도감 있게 전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국정과제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하이패스 확대 구축, 줄음선평터 개소 등 정량지표 위주로 설정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ITS 로드맵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 정도와 정책 개선 의지가 높아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운영 등 현장소통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우수	·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향상, ITS 확대 구축으로 인한 정체 감소 등 기대
3-3. 정책만족도	9.8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무선제어 입환) 운전면허, 실무수습 기준 등 관련제도 정비하고, 안정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및 면허 보유자 양성(6월~)
- (시설관리 디지털화) 경부고속선 2단계구간·호남고속선·경부선 등 전기설비 IoT 구축 계약체결(6월) 및 16개 노선 구축 완료(12월)
- (신호 국산화) 전라선 구간(180km)에 KTCS-2 현장설치(3월) 및 자체시험 등 완료(9월)하고, 시설물검증(~'22.1월) 추진 중
 - 일산선 백석~대화 구간(6.6km)에 KTCS-M 현장설치(11월)를 완료하고,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적·동적시험(~'22.6월) 추진 중
- (노후차량교체 국비지원) 25년 이상 지난 노후 도시철도 차량을 적기 교체할 수 있도록 노후전동차 국비지원 사업 본격 추진
- (철도차량 패키지구매) 차량·부품시장의 동반성장 및 강소부품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차량+부품) 구매계약 제도 시범 발주(12월)
- (종합시험선로 활성화) 사용료 인하(5월)를 통해 차량·부품 업계의 안정적·효율적 시험기반 마련 및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
- (철도산업 클러스터) 철도 산업·기술 등 인프라를 집적하는 '철도산업클러스터 추진전략' 수립(5월) 후 타당성검토 용역 착수(10월)
- (국제철도안전협의회) “철도안전과 새로운 도전” 주제로 개최(10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철도안전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시설의 현장반영 실적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무선제어 입환 본사업 및 KTCS-2·KTCS-M 본격적용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종합 시험선로 사용료 인하 등 대표성 있는 정량지표 발굴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선로 사용료 인하 등 이해관계 대립정도와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4.9%	· 대부분 과제를 적기 완료하였으나, 철도차량 운전규칙 개정 등 일부과제 달성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차량제작사 간담회 개최 등 주요 현장방문을 통한 정책 추진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스마트 철도안전 체계 마련, 노후시설 투자 확대 등으로 철도사고 예방 기대
3-3. 정책만족도	9.15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보완점을 도출하고 변화된 정책환경을 점검하는 등 추진방향 설정(10월)
- (법·제도 고도화) 종합시험운행 시험항목 최신화 및 그간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9월)
 - 궤도 안전·유지관리 의무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 마련(12월)
 - 안전보고서 제도화, 도시철도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안전관리 체계 승인제도 개선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 마련(12월)
 -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철도분야 제도 개선 및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10월)
- (재난대응 역량강화) 무인운전 비정상 상황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선 및 불시 비상대응훈련 실시(2월)
- (운영기관 평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안전수준을 진단(4월)하고, 최하위기관에 대해 안전관리 컨설팅 진행(6월)
- (안전감독관활동) 운행장애 감소를 위한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시정조치 이행 등 사후 관리 및 안전감독 고도화 활동 계획 수립(1월)
- (관제 세분화) 고속·일반·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단일자격인 관제자격 증명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마련(4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철도안전을 위한 입법 사항들이 아직 반영되지 못한 부분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철도안전법」 및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철도사고 사상자수 감축, 운행장애 건수 감축 등 대표성 있는 정량지표 적절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철도사고 사상자수 감축 등 적극적 목표 설정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7.6%	· 대부분 추진과제를 적기에 완료하였으나, 제2철도 교통 관제센터 기본계획 고시 등 일부과제 달성 지연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철도 보안검색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객차 내 CCTV 설치계획 조기화 등 정책 추진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철도범죄 신고 및 대응을 제고, 사망자수 및 운행장애 감축 등 기여 기대
3-3. 정책만족도	9.4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재난대응) 여름 및 겨울철 공항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풍수해(태풍·호우, 5.10 / 대설, 10.28) 매뉴얼 정비
- (지상조업 안전) 지상조업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노조, 조업사) 간담회 등을 통해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 수립
- (항공장애표시등) 매년 정부가 위탁검사하는 표시등·표지(약 17,000개)를 소유·관리자가 자체 점검하는 등 관리 및 책임성 강화(~'21.11)
- (소음대책) 선제적 소음 관리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소음대책 추진을 위해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마련('21.9)
- (기본계획) 첨단 항행시스템 구축 등 4대 전략, 16개 단위과제, 105개 사업('21~'25, 4,766억원)의 추진, “제1차 항행시설 발전 기본계획” 수립
- (KASS 구축) 한국형 정밀위치보정시스템*(KASS) 기준국, 위성운영국 등 인프라 구축 및 제2호 위성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진행
 - 위성항법서비스 등 실무업무 전담 ‘항공위성항법센터*’ 신설('21.2)
- (항행시설 사용료)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사 재정부담 감면 근거 마련('21.6) 및 제주남단 신항로(日→韓) 이관에 따른 영공통과료 징수 시행('21.9)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지상근로자 안전 관련 공항시설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적정 여부 등 추가 검토 시일 다소 소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의한 항공사 재정어려움을 고려하여 항행시설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24~)하여 부과하는 요율체계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항소음 저감, 주민만족도 제고 등 대표성 있는 지표 적절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공항 소음 저감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99.9%	· 추진과제 대부분 적기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지상조업 안전관리방안, 공항소음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지상안전 사고 발생 감소, 항행 안전시설 장애 시간 감축 등 기대
3-3. 정책만족도	8.84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개소) 범국가적 항공안전데이터 공유·협력을 위해 통합 DB 센터* 개소(5.27, 김포공항)

*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운영, 수집 데이터 확대(사고·안전감독·항공통계 등 3종 추가)

- (제도홍보 강화) 안전보고제도(의무·자율) 홍보, 보고자 불이익금지·개인정보 보호 법제화 등 제도 개선내용 설명회 개최('21.上, 3회)
- (항공사 안전장애) '21년 중점관리분야 선정·지표화(21.3),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안전감독으로 주요 안전장애 발생률 대폭 감소('20년比 63.8% 감소)
 - * 운항분야 주요 안전장애(19종) 발생률 : 1만 비행당 4.7건('20년) → 1.6건('21)
- (신생항공사 안전관리 지원) 운항증명을 신규 발급받은 항공사에 대해 취항後 6개월까지 밀착 안전점검을 통해 운항지표·안전장애 0건 발생
- (조종사 훈련·심사제도 개선) 팬데믹 이후 조종사 기량복원 훈련과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조종사 맞춤형 훈련을 시행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21.8)
- (코로나-19 방역관리) 항공교통을 통한 감염(기내감염 등)을 예방하고,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백신의 항공수송에 적극협조
- 여객기 객실 내 화물승인 간소화(21.3),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 개정(21.5)
- (항공회랑 환수·운영) '21.3.25일 일본 관제권을 37년만에 환수 및 항공회랑을 폐지하고, 동 항공로에 대한 관제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제공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년대비 국적항공사 주요 장애 발생 건수는 줄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교통량 급감으로 비행편수 대비 발생률 목표 달성 애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포스트코로나 대비 항공교통안전을 증진하고, 교통 수용량 증대를 위해 항공교통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차질없는 후속조치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항공사 주요 장애 감축, 비정상적 항공회랑 폐지 등 대표성 있는 지표 다수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장애 발생률 감소 등 이해관계 대립과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 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항공사 안전지표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 구성·운영 등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98.75%	· 성과지표 대부분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백신접종 후 업무수행기준 마련, 종사자 백신 접종 등 항공업무 안전 확보 기대
3-3. 정책만족도	8.9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건설안전특별법) '20.9월 발의 이후, 관계기관(업계·고용부 등) 이견 조율 등 입법 보완을 거쳐 재발의(6.16), 공청회 개최(9.28)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하위법령을 사전에 준비하고, 재해보험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분야는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설계
- (건설안전 강화대책) 안전역량이 곧 경쟁력인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고강도 점검 등 체감되는 현장관리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이행('21.3)
 - 기존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건설사고 사망자 감소 가속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행
- (소규모 취약현장)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공개 및 고위험 현장은 고강도 불시점검 실시
 - 우기, 동절기 취약현장 및 공종을 집중관리하고, 누구나 위험현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아차사고 신고 제도도 활성화
- (스마트 안전장비) 건설장비와 무선통신 등을 융합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21.9, 건진법 시행령 개정)
 - '22년도 본사업 추진에 앞서, 총 12개 현장을 시범사업(국토안전관리원, 5억원)으로 선정,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도입성과 확인 중
- (중대재해법) 중대재해 보고체계 구축, 대응상황·현안 공유·논의, 건설현장·시설물 등을 포함한 대책수립을 위해 TF 구성·운영('21.1~)
 - 법 적용대상, CEO 의무사항 등 시행령 제정·공포('21.10.5), 가이드라인 제정·배포('21.12) 및 종합대책 수립('21.12)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속적인 노력으로 건설안전 사망자는 감소중('21: 전년대비 9%, 잠정)이나 건안법 제정, 안전문화 정착 등을 통해 보다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S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수 감축 등 대표성 있는 정량 지표 다수 구성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S	· 사망사고 감축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 붕괴사고 등에 따른 대책회의, 방지대책 마련 등 변화된 여건에 대한 대응 노력 우수
3-1. 성과지표 달성도	93.8%	·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운영 등 현장소통 노력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법제도 확충, 기반시설 안전강화 등으로 건설 현장 인명피해 감소 등 기대
3-3. 정책만족도	9.93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허가절차 간소화) 건축물 구조 관련 사항은 착공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개선하여 허가 시 제출도서 최소화(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6.25)
- (건축규제 해소) 채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공동주택 채광기준 개선(건축법 시행령 개정, 11.2)
- (창의건축 활성화) 사업 특성에 맞게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위해 특례 대상* 확대 및 민간 제안 도입(1.8)
 - * 공동주택: 300세대→100세대 이상, 단독주택: 50동→30동 이상, 한옥: X→10동 이상
- 특별건축구역 업무 지원을 위해 실제 적용사례 및 고려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고시(11.3)
- (불법전용 방지) 생활숙박시설 전용 방지방안을 마련(장관님 방침, 3.30)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하고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11.2)
 - 신규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에 적합한 별도 건축기준을 마련(11.2)하고, 기존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2년간 특례(10.14)
- (공공건축 절차 개선) 내실 있고 원활한 건축기획을 수행을 위해 사업절차, 업무사항을 안내하는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마련('21.10)
- (스마트건축) 건축물 생애주기를 맞는 스마트기술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건축 인증지표 마련(12월)
 - 스마트 건축기술을 활용한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LH 공공주택에 대한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 추진(10.24)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제도개선 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 홍보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건축심의 개선, 건축기획 수행 주체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	A	· 업무계획 등 상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건축기준 합리화, 공공건축 조성절차 내실화 등 대표성 있는 지표 발굴
1-2. 성과지표의 난이도	A	· 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의지 등 다소 높음
2-1. 계획이행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2-2.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 특별건축구역 관련 전문가·지자체 의견 수렴 등 현장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 노력
3-1. 성과지표 달성도	10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보통	·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건축허가 소요 기간 단축 등에 기여
3-3. 정책만족도	9.35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1-①	○ (주거플랫폼) 지역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플랫폼 확산 필요 ○ (지역개발사업) 신속한 예산집행	○ '22년 지역개발사업 예산집행계획 수립('21.2월) ○ 지역개발사업 분기별 사업추진 및 예산점검 실시 ○ 주거플랫폼 선정규모 확대('22.9월)
I-2-①	○ 충북혁신도시 도침산단 지정	○ 공동주택 비율 축소 또는 별도 추진 방안 마련 후 관계부처 재협의 추진('22.4월)
I-3-②	○ 온전한 기재변환 및 용산공원 조성 추진	○ 미측과 지속 협의 추진(~'22.12월)
I-3-④	○ 지하공간통합지도와 정밀도로 지도를 조속히 구축 완료하고 최신 정보로 갱신·서비스할 필요	○ 지하공간통합지도 전국 85개 시 갱신, 77개 군 전체 구축 완료('22.12월) ○ 정밀도로지도 일반국도 전체 구축 완료('22.12월)
II-1-①	○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상용화 지원	○ BIM 설계대가 마련(도로 부문, '22.12) ○ 벤처기업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건설 지원2센터 건립('22.6)
II-1-④	○ 인천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지연 최소화	○ 준공 추진('22.4월)
II-2-③	○ 코로나19 회복 단계별 조종인력 수요예측을 통해 향후 조종사 채용 등을 고려한 조종인력 양성사업 추진방향 마련 필요	○ 항공인력양성사업 발전방안 마련('22.12월)
IV-3-②	○ 해외 수주, 미래 기술 개발 등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실현되는 과제로, 정책 추진 체감도 제고 필요	○ 추진 정책·성과 등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추진(~'22.12)
IV-3-③	○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이행	○ 이륜차 안전검사 도입(자관법 발의, '22.6)
V-2-①	○ 무선제어 입환 본사업 및 KTCS-2·KTCS-M 본격적용	○ 무선제어 입환 본사업('22.6월) ○ KTCS-2 본격적용('22.6월) ○ KTCS-M 본격적용('22.9월)
V-2-②	○ 「철도안전법」 및 「궤도운송법」 개정안 입법화	○ 「궤도운송법」 개정('22.6월) ○ 「철도안전법」 개정('22.12월)
V-2-③	○ 항행시설 사용료 개편에 따른 최적의 부과율 체계 마련	○ 최적의 부과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연구용역 발주('22.2~12)
V-2-④	○ 포스트코로나 대비 항공교통안전을 증진하고, 교통 수용량 증대를 위해 항공교통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차질없는 후속조치 필요	○ 국가항행계획 이행 및 항공안전법 개정 추진(연중)
V-3-②	○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 홍보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건축심의 개선, 건축기획 수행 주체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 추진	○ 건축기획 수행 주체 확대를 위한 건축 서비스법 시행령 개정('22.2분기) ○ 건축심의 개선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22.3분기) ○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22.3분기)

[붙임] 2021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 (정부조직법 제42조)

□ 핵심기능

국토·도시	■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정책, 하천관리계획 등 수립·추진 ■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 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도시공원 등 추진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주택·토지	■ 주택공급 확대 등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안정 기반 구축 ■ 내집마련 기회 확대 지원 및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 ■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국가 공간정보체계 기반 조성
건설	■ 건설산업 발전·육성 방안 마련 및 건설일자리 개선대책 추진 ■ 해외건설 활성화 대책 추진 및 글로벌 인프라협력외교 총괄 ■ 건설현장 및 기반시설물 안전대책 수립·추진
교통·물류	■ 종합교통체계, 광역교통체계, 통합연계형 물류체계 구축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교통사고 감축 ■ 자동차 등록·안전관리·운행 등 자동차 정책 수립·추진
항공	■ 항공 관련 제도, 공항 개발, 항공물류 및 항공보안 등 총괄 ■ 항공협정 체결 및 운수권 배분, 항공자유화 ■ 항공사고예방 정책, 공항 소음대책·환경관리 총괄
도로	■ 빠르고 편리한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국토경쟁력 강화 ■ 안전하고 과학적인 도로관리 등 국가 간선기능 유지 ■ ITS 등 첨단운영체계를 통한 도로교통서비스 제공
철도	■ 철도산업발전 지원 및 국가철도망 구축 ■ 일반·고속·광역·도시철도 제도운용 및 확충, 유지보수 ■ 철도사업제도 운용 및 철도물류체계 개선, 철도산업기술 육성

□ 조직도



※ 한시조직(2개) : 신공항기획과(∼22.6.30.),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23.3.31)

※ 총액인건비제팀(7개) : 디지털소통팀(∼23.9.30.), 스마트도시팀(∼23.1.31), 공정건설추진팀(∼23.5.31), ICAO팀(∼23.5.31.), 디지털도로팀(∼23.5.31.), 기업성장지원팀(∼23.9.30), 주택임대차지원팀(∼23.9.30)

※ 벤처형 조직(1개) : 미래드론교통담당관(∼22.4.30)

※ 별도조직(8개) : 공공주택본부(∼23.9), 도시재생사업기획단(∼22.6),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22.3),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23.12)지적재조사기획단(∼22.6), 혁신도시발전추진단(∼22.2), 국가건축정책위원회기획단(∼22.6),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23.2)

※ 긴급대응반 (1개) : 코로나19생활물류긴급대응반(20.11.13∼22.5.31)

□ 소속기관 [87개 : 1차 15개, 2차 41개, 3차 31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지방국토 관리청<5>						
본부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과 광역교통요금과 광역교통운영국 광역시설운영과 간선급행버스체계과 광역환승시설과	운영지원과 기획과 교육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4.5) 운영지원과 지역협력과 보상과 도로관리국(4) 도로계획과 도로공사과 민자도로관리과 교통안전팀 건설안전국(4) 건설관리과 건설안전과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4) 운영지원과 지역협력과 보상과 도로관리국(4) 도로계획과 도로공사과 교통안전팀 건설안전국(4) 건설관리과 건설안전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4) 운영지원과 지역협력과 보상과 도로관리국(4) 도로계획과 도로공사과 교통안전팀 건설안전국(4) 건설관리과 건설안전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4) 운영지원과 지역협력과 보상과 도로관리국(4) 도로계획과 도로공사과 해상교량안전과 교통안전팀 건설안전국(4) 건설관리과 건설안전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4) 운영지원과 지역협력과 보상과 도로관리국(3.4) 도로계획과 도로공사1과 도로공사2과 교통안전팀 건설안전국(4) 건설관리과 건설안전과	
		국토관리 사무소<18>	의정부, 수원	홍천,강릉, 정선	논산,충주, 보은,예산	광주,남원, 순천,전주	진주,포항, 영주,진영,대구	
		출장소<9>	강화(수)	양양(강)	서천(예)	해남(광),무주 (남,보성(순)	거창(진),상주 (대),울진(포)	

지방항공청 <3>	서울지방 항공청	부산지방 항공청	제주지방 항공청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서울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부산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광주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제천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항공철도 사고조사 위원회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국토지리 정보원	항공교통 본부
	관리국(4.5) 운영지원과 보안과 안전운항국(4) 항공안전과 항공운항과 항공검사와 관제통신국(4) 관제과 항공정보과 통신전자과 공항시설국(4.5) 공항시설과 공항지원과 공항안전과	관리국(4.5) 안전운항국(4) 항공안전과 항공운항과 항공검사와 공항시설국(4.5) 공항시설과 공항안전과 항공관제국(4.5)	운영지원과 안전운항과 항공관제과 항공시설과	운영지원과 기획과 수사과 센터<4> 대전, 천안, 오송, 서대전	운영지원과 수사과 광역철도수사과	운영지원과 수사과	운영지원과 수사과	운영지원과 수사과	사무국(4)	사무국(3.4)	기획정책과(4) 운영지원과(4) 위기기준과(3.4) 지리정보과(4) 스마트공간 정보과(4.5) 국토조사과(4) 국토위성센터(4)	운영지원과(4.5) 항공교통안전과(5) 항공교통조정과(4.5) 항공관제과(5) 공역정보과(5) 시설운영과(5) 항공위성항법센터(4)
항공관리 사무소<1>	김포(4)			센터<22>	서울,수서, 청량리,영등포 용산,수원, 광명,부평, 남춘천	부산,동대구, 신경주,구포, 구미	익산,광주송정, 목포,순천	제천,영주, 서원주,강릉				인천항공 교통 관제소(4)
기타<1>	비행점검센 터(5)											
공항출장소 <12>	양양,원주, 군산,청주	여수,울산,대구, 무안,포항,광주, 사천,울진										

1차 소속기관 2차 소속기관 3차 소속기관 책임운영기관(2) : 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

2. 전략적 목표체계 [기획담당관실]

임무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효율적인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터전 조성

비전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

전략목표

I.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II.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III.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IV.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V.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성과목표

1.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1. 기술혁신으로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한다.

1.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1.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수준을 달성한다.

2. 기존 지역혁신
거점을 활성화한다.

2. 공정문화
안착으로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다.

2. 속도감 있는
서민 주거거점을
공급한다.

2.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2. 첨단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기간교통망을
조성한다.

3. 국토·도시 분야
탄소 중립,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3.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3. 교통물류
혁신으로
경제회복을
견인한다.

3. 건설 현장
위험요인을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 1)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성과지표

수도권 인구집중도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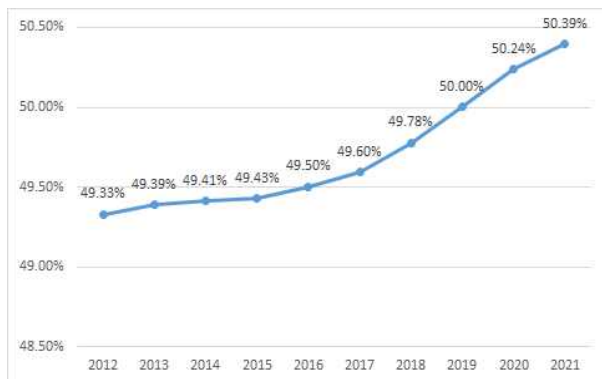
〈 수도권 인구집중도 〉

- 개념 : 수도권 인구집중도
- 조사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주민과)
- 조사대상 :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제외)
- 조사방법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 측정산식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주민등록인구 / 전국 주민등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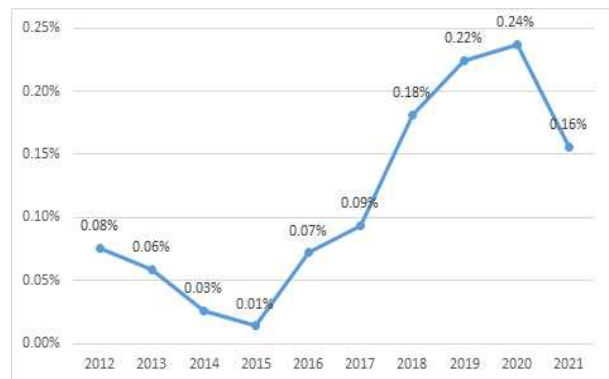
□ '21년 측정결과

-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는 그동안 점진적으로 상승하다 '19년 50%를 초과하였으며 '21년에도 인구 집중은 지속(50.39%)되었습니다.
- 한편, 지난해에는 그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 등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도 증가율은 6년만에 감소*하였습니다.

* '19년 0.22% → '20년 0.24% → '21년 0.16% (통계청, '21.12)



<수도권 인구 집중도 추이>



<수도권 인구 집중도 증가율 추이>

□ 성과분석

-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국정기조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전략으로 ‘초광역협력’을 제시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와 살기좋은 생활여건을 제공하는 거점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첫째, 국토를 수도권 일극에서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공간분야 포함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21.10.14)하고, 지역주도의 ‘초광역권 계획’ 도입을 위해 국토기본법을 개정하였습니다.(’21.6 발의, ’22.1 개정)
- 둘째, 지방 광역시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후보지 2곳(대전 ’21.3, 부산 ’21.11)을 추가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례를 포함한 특별법 발의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발의(5.31, 강준현의원), 범부처 지원·관리를 내용으로 ‘범정부 종합 지원방안’ 마련(9.30), ‘지역소멸 선제 대응방안(11.23 경제중대본)
- 셋째,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산어촌에 ‘주거+일자리+생활SOC’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투자선도지구도 신규 지정**하여 기반시설·세제·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 * 우리부 공모(12건), 농식품부 연계(5건), 해수부 연계(2건), 균형위 협업(4건) 등
 - ** 총 4곳 : 광주 송정KTX역세권(’21.3), 괴산 자연드림타운(’21.9) 등
- 넷째, 혁신도시는 특구 지정 등을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이전 기관을 활용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도 지속 힘쓰고 있습니다.
 - * (입주기업수, 개社) 412(’17) → 693(’18) → 1,425(’19) → 1,663.(’20) → 2,047(’21)
(정주인구, 만명) 5.9(’14) → 15.0(’16) → 19.3(’18) → 22.4(’20) → 23.1(’21.9)
(지역인재 채용실적, %) 23.4(’18) → 25.9(’19) → 28.6(’20)

- 다섯째, 전국 201개 지자체, 총 488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정하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쪽방촌과 위험건축물을 정비하는 도시문제 해결형 재생사업 등을 통해 도시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 도시재생뉴딜(누적) : ('17) 68곳 → ('18) 168곳 → ('19) 284곳 → ('20) 401곳 → ('21) 488곳

- 여섯째,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초광역협력 지원을 위해 대학의 입지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캠퍼스혁신파크 신규 선도사업지 2곳 선정을 완료('21.4)하고, 기업지원 등 중장기 추진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21.12)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노후거점산단법'을 개정('21.7), 산단 대개조 신규사업지 5곳을 선정, 기존 사업지(5곳)는 '경쟁력강화지구' 지정('21.3)하여 노후산단을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고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 일곱째, 주요 균형발전 거점인 새만금을 그린뉴딜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21.2, 총리주재 새만금위)하고, 육상태양광 3곳(300MW)은 모두 착공(1구역 '20.12, 2·3구역 '21.4), 창업클러스터 사업 착수사업협약 체결(SK, '21.4), 스마트그린 산단 종합계획을 수립('21.11)하였습니다.
- 행복도시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선정(2.8) 및 부지조성 착공(5.24), 국제기구 유치(UNESCO 세계유산센터 설립)를 위한 제도개선(法 4.16, 영 6.22)을 완료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한편, 수도권은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 최초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21.6)하고, 정비계획의 핵심과제인 「공업 물량 개편방안」('21.3)을 마련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하고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도심융합특구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 다양한 산업·일자리 거점과 함께,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조성하여 자족경제·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2)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성과지표

① 국토교통분야 취업자 수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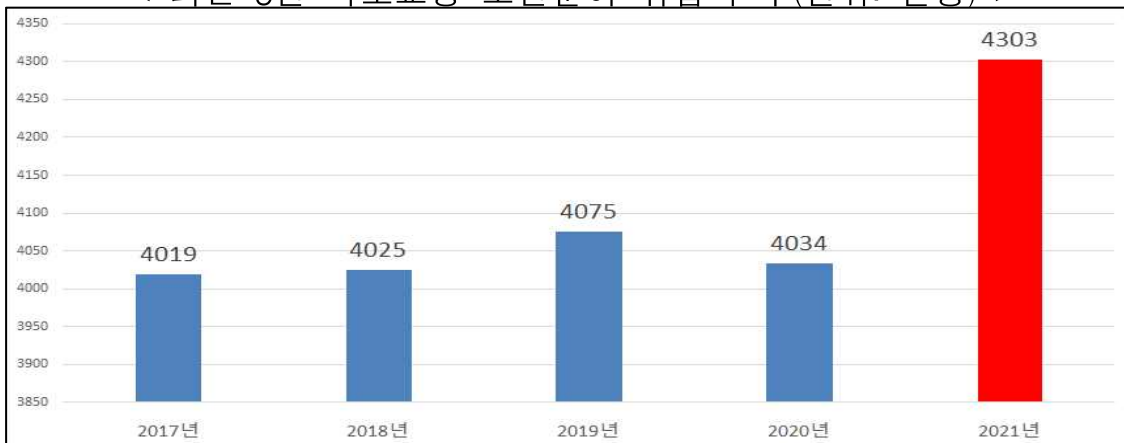
< 지표명 >

- 개념 :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중 국토교통부 소관 업종의 취업자 수
(소분류 기준 : 건물건설업, 육상 여객 운송업 등 22개 업종)
- 조사기관 : 통계청
- 조사대상 : 전국 233,900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방법 : 면접조사 방식
- 측정산식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자료 중
국토교통 소관 산업(건물건설업, 육상여객 운송업 등 표준산업분류 중
22개 소분류 업종)의 총 취업자 수를 합산

□ '21년 측정결과

- 건설, 운수, 부동산 등 국토교통 소관분야의 '21년 4월 기준
취업자수는 430.3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26.9만명 증가하였습니다.
- '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하였다가, '21년은 건설
수요 증가와 택배, 이륜차배송(퀵서비스) 등 비대면 경제 성장으로
취업자수가 6.7%p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5년 국토교통 소관분야 취업자 수(단위: 천명) >



□ 성과분석

-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맞춰 8대 혁신성장 동력*을 선정하여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으로 자율주행과 드론, 스마트 시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 건설 지동화, 스마트시티, 가상국토공간, 자율주행차, 지능형철도, 드론, 제로에너지 건축, 스마트 물류

- 이에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에 따른 고용창출 및 창업공간·교육 훈련 제공 등 과제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18년부터 '21년까지 약 12만명(전체목표 比 91%)을 고용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 분야 한국판 뉴딜* 중 스마트시티, 디지털 기반 R&D, 탄소중립 등 신규예산 확보를 통해 비대면 산업 육성, 국민 안전,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21년) 2.3조원(디지털 1.6, 그린 0.7) / ('22년) 2.81조원(디지털 1.64, 그린 0.83, 휴먼 0.34)

- 소관 업종별로, 건설업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건설수요 등으로 전년대비 13.5만명이 증가하였고, 운수·창고업은 소화물 운송업(택배 등), 물류창고업 등 비대면 업종의 성장으로 10.5만명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여 기능인력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21.6)

- 항공 분야 종사자의 고용유지 불안과 향후 고용 안정 시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종·정비·승무원·관제사 등 전문인력 관리 및 정비산업 육성 대책도 수립하였습니다.

* 중장기 항공전문인력 수급관리방안('21.12),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1.8)

□ 향후 추진계획

- '22년도 노동시장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균형·물류차질 등에 따른 경제회복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불안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 '26년 국토교통 분야 취업자 수(지표)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자리·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향후 소관 업종별 취업자 수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건설 및 공간정보, 항공, 자동차 등 전문분야의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근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그에 따른 고용량도 확대하겠습니다.
 - 자율주행, 드론, 물류 등 핵심 신산업 육성 및 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 구축,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관련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취약 계층의 창업 촉진 및 구직자 지원을 위해 사무공간·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대학 중심의 지역공헌센터, 스마트시티 내 인큐베이팅센터 조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여건을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고용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방안의 후속조치로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고용유지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제도를 통한 취약업종의 고용안전망 유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 3)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성과지표

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고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표현하는 지표
- 조사기관 : 국토교통부
- 조사대상 : 전국단위의 주택을 표본으로 조사
- 조사방법 : 총 주택수(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장기공공임대주택 수(임대주택통계)
- 측정산식 : 장기공공임대주택수(B)를 총 주택수(A)로 나눈 값의 평균치를 구하여 계산

□ '21년 측정결과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2.0('20.3) 등에 따른 공급 확대로 최근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지속 증가하여,
 - '20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약 8%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추이 >



* '21년 '장기공공임대주택수'의 임대주택 통계는 22년 하반기에 발표예정

□ 성과분석

-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통해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 「주거복지로드맵(‘17.10)」, 「신혼부부·청년주거지원대책(‘18.7)」, 「주거복지로드맵 2.0(‘20.3)」 등을 마련·추진 중입니다.
 - 정부 출범부터 5년(‘18~’22)동안 공공임대주택 70만2천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거복지로드맵 2.0(20.3)을 통해 ‘25년까지 공급계획을 확장(공공임대 연평균 14만호 공급)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 4년간(‘18~’21) 공공임대 총 56.0만호를 생애주기에 맞춰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청년층에게는 일자리연계형·기숙사형 등 청년특화주택을 플랫폼으로 학업·취업 등을 연계 지원하고, 비주택리모델링* 도입으로 도심 내 공급을 강화하였습니다.
- * 청년 친화적 공유공간(소규모 작업공간, 스튜디오 등) 제공
-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하고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양질의 신혼특화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및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 ‘21년 신혼특화형 국민임대 3곳 최초입주(광주효천, 시흥장현, 남양주별내) 및 신혼희망타운 2곳 최초 입주(위례, 평택)
- 고령자에게는 사회복지시설(식사·여가서비스 제공)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하고 자가 가구에 단차제거 등 안전편의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 일반·저소득에게는 다자녀·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우선 공급하고, 특히 다자녀가구에 전세임대 임대료도 완화(최저 1%)하였습니다

- 이러한 국토부의 정책 노력이 다음과 같은 실제 서민 주거 지표의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 '20년은 4.6%로 감소하였으며,
- 1인당 주거면적은 '17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여 '20년 33.9m²로 '19년 32.9m²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주거면적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남

□ 향후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22년 계층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단위 : 만호) >

합계	청년	신혼	고령자	일반
14.75	4.0	4.9	1.1	4.75

* 공급물량(만호, 연평균): ('08~'12) 9.1, ('13~'17) 11.2, ('18~21e) 14, ('22 목표) 14.75

- 청년층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주택 1만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1.5천호 등 공공임대 4.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 청년 월세지원 신규 지원('22~) 및 청년 주거급여 확대를 통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은 청년의 주거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신혼부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육아나눔터, 층간소음 방지 등 육아특화 설계를 강화한 **신혼특화단지** 등 공공임대 4.9만호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분양형)에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중형평형(60㎡초과)를 신규도입 하겠습니다.

* 특화단지: 인천검단·부산장안 등, 신혼희망타운: 서울양원 등 17단지 입주

- **고령자**를 위해 주거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 1.6천호**, 고령자 친화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리모델링 주택 1천호** 등 공공임대 1.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 IoT센서+AI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전국 공공임대주택으로 점진적 확대**하겠습니다.

* IoT센서를 활용, 고령자가 쓰러지는 등 돌발상황 발생시 선제적 돌봄·의료서비스 제공

- **일반 저소득층**을 위해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7천호)** 및 **취약아동가구(2천호)** 등에 공공임대를 우선지원하고, **쪽방촌 정비*** 사업을 본격 착수(영등포·대전역·서울역) 하겠습니다.

* 영등포·대전역은 쪽방주민 순환 이주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착공('22.下) 추진, 서울역은 쪽방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한 지구계획 수립 추진

- 아울러, 양적공급에 치중하지 않고 공공임대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성과지표

② 1인당 주거면적

□ 성과지표 개요

〈 1인당 주거면적 〉

- 개념 : 1인당 주거면적은 물리적 주거밀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국민의 쾌적한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거의 질을 표현하는 지표
- 조사기관 : 국토연구원 및 한국리서치
- 조사대상 : 전국단위의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약 6만호)
- 조사방법 : 전국단위 가구방문 및 대면 면접조사 실시
- 측정산식 : 개별가구의 주택사용면적(S_i)를 개별 가구원수(n_i)로 나눈 값의 평균치를 구하여 계산

□ '21년 측정결과

-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21.8.13 발표), 1인당 주거면적은 33.9㎡로 2019년 32.9㎡ 대비 소폭(1.0㎡) 증가하였습니다.
- '17년도부터 건축물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하였으며, '17년도 이후 1인당 주거면적이 8.7% 상향되었습니다('17년 31.2% → '21년 33.9%).

< 1인당 주거면적 (단위: ㎡) >



- * 주거면적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조사 대상자의 응답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남
- ** '1인당 주거면적'을 포함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전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익년도 상반기 중 발표되므로, '21년도 표본의 조사결과는 '22년 상반기 중 도출 예정

□ 성과분석

○ 現 정부 출범이후 「주거복지로드맵」(17.11.29)을 발표 하여 공공주택 공급,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세웠으며, 「주거복지로드맵 2.0」(20.3.20)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등을 추진·확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신혼부부·청년 등 충분한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계층을 위해 신혼특화, 역세권 인근 등 수요자 요구 반영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면적을 포함한 거주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년에는 전년대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감소하고 주거환경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만족도가 상승하는 등 주거수준이 개선되었습니다(2020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 국민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표본가구 대면조사 형식으로 '06년부터 실시(2년 주기)하였으며 '16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음

**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는 용역 진행('21.6~'22.6) 중이므로 2022년 상반기 발표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7년 5.9%, '18년 5.7%, '19년 5.3%, '20년 4.6%로 지속 감소하였습니다.

* 3인(방2개, 36㎡), 4인(방3개, 43㎡), 5인(방3개, 46㎡), 6인(방4개, 55㎡)

- 주거환경 만족도(4점 척도)는 '18년 2.94점, '19년 2.94점, '20년 2.97점으로 '18년부터 지속 상승하였습니다.

- 주거복지 향상 노력으로 인해 '2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4.4%가 '만족'으로 응답하여 '19년(93.5%) 대비 상승하였고, 만족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49.2%)',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20년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

구분	만족하는 이유	비중
1위	저렴한 임대료	49.2
2위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38.3
3위	시설이나 주변여건이 좋아서	8.6
4위	가구상황(가구원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적합한 주택규모	3.9

□ 향후 추진계획

- 1인당 주거면적이 '21년('20년 조사결과) 역대 최고 수치 33.9㎡를 달성 하였으므로, 추세 유지를 위하여 연평균 0.15㎡씩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25년까지 34.5㎡ 목표)

* (목표) '22년 : 34.05㎡ / '23년 : 34.2㎡ / '24년 : 34.35㎡ / '25년 : 34.5㎡

- 주거공간 보안 강화, 감염병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한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면조사로 실시되는 주거실태조사를 비대면 방식과 병행할 계획입니다('22년 시스템 구축 후 '23년 병행 도입).

* ('21) 시범조사^{완료} → ('22) 병행조사 시스템 구축^{예정} → ('23) 비대면 30% 병행 실시^{예정}

- 주거공간이 확보된 양질의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 공적임대주택 18만호 = 공공임대 14만호 +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 특히, 1인가구 공급면적을 확대(18㎡→최대 36㎡)하고 중형평형(60~85㎡) 까지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

- 대출조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통해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도 쾌적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 계층도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하우스를 공급하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청년 주택 등 건설 및 임차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22년 주거복지 향상, 주택시장 안정세 공고화,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략목표 4)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성과지표

① 철도 연장

□ 성과지표 개요

〈 철도 연장 〉

- 개념 :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를 위하여 신규 철도 개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증가하는 연장 현황
- 조사기관 : 코레일, SR 등 철도운영기관
- 조사대상 : 전국 철도연장(고속, 일반, 도시철도 등 연장)
- 조사방법 : 내부 통계 자료
- 측정산식 : 전국 철도연장(고속, 일반, 도시철도 등 연장) 합산 * 철도키로 기준

□ '21년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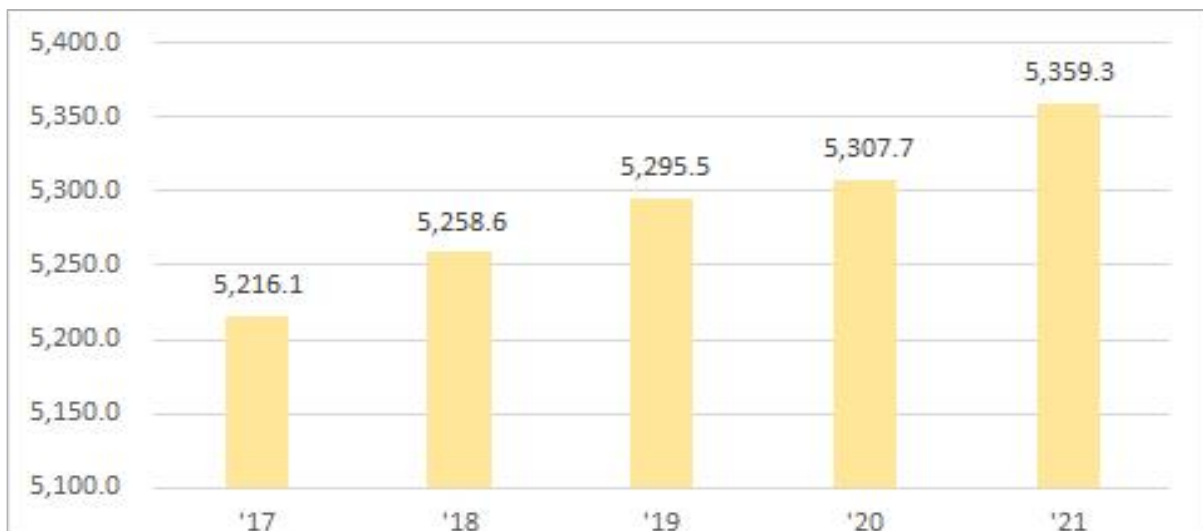
- 철도연장 '21년 목표는 올해 관리과제 성과지표 중 6개 노선의 개통(전철화 등 포함)* 등을 반영하여 설정하였으며,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일광~태화강, 동해남부선(울산~포항) 태화강~신경주, 중앙선 영천~신경주, 대구선 동대구~영천, 중부내륙선 이천~충주, 경의선 임진강~도라산 전철화

- 당초 목표 노선을 모두 개통하여 철도 서비스를 적기 확충하였습니다.

- '21년 철도 예상 연장은 5,364.0km이며, '17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 다만, '21년 측정결과는 단순 준공 연장을 포함하였으며, 최종 통계 확정 시('22 下) 일부 변동 가능



□ 성과분석

- 철도 연장은 균형 발전, 교통 편의 증진 등 철도서비스 확대, 나아가서는 글로벌 철도 연결 기반이 되는 지표입니다.
- 철도는 높은 정시성,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주요 도시를 연결(고속·일반 철도)하고,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에 기여(광역철도)하고 있습니다.
- 21년에는 영남권 4개, 중부내륙(이천~충주, KTX-이음 준고속 투입), 경의선(임진강~도라산) 전철화 등 6개 사업을 개통하여,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하여,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동대구~영천	영천~신경주	신경주~태화강	태화강~일광	이천~충주
34 → 27분 (△7분)	39→24분 (△15분)	37→33분 (△4분)	78→64분 (△14분)	105→30분 (△약75분)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효율·체계적인 철도망 확충을 위해 향후 10년간의 철도 건설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1~‘30)”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21.7)

* 총 101개 사업 119조원 투입 계획, 신규사업은 44개, 58.8조원 규모

- 계획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을 대폭 확대* 하고, 조속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별 1곳씩 선도사업을 선정(‘21.8)하여 사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착수하였습니다.(‘21.10)

* (3차망) 1개 사업, 22.5km, 0.5조원 → (4차망) 11개 사업, 444.3km, 12.1조원

<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시간단축 예상 효과>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72→50분대	118→20분대	81→39분대	90→40분대	93→30분대

- 아울러, 수도권외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GTX, 신안산선, 신분당선(신사~강남) 등 사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GTX-A, 신안산선, 신분당선 신사~강남) 공사 중, (GTX-B) 재정 기본계획, 민자 RFP 작성, (GTX-C)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서부권) 사전타당성조사 중

- 철도망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였음에도, 수백차례의 지역의원, 지자체 면담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 조정에 힘써 수용성 높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고,
- 철도건설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견 조율, 역위치, 노선 등에 대한 지역 민원 설득·갈등 조정 방안을 안전 확보하에 추진하여 목표 사업을 지연 없이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 건설을 통한 네트워크 확충 외에도 신규차량·속도향상·노선신설 등 여건변화에 따른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고민하여 중장기 철도운영 세부전략·차량기지 운영 계획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철도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를 아우를 수 있도록, 동해북부선 착공, 경의선 전철화 등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제도적 준비·관계국 협력*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국제철도화물·여객운송협정 가입 본격 추진(외교부 제출 完)하고, OSJD 활동, 한-러·한-중 협력회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국제포럼 개최 등

□ 향후 추진계획

- 새로이 수립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기 개통하는 등 지속적으로 철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철도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내 사업 완료 시, 2030년까지 고속·일반철도 기준 약 1천 여km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2년에는 진접선, 신분당선(신사~강남 구간), 대곡소사선(소사~원종 구간) 등 3개 사업 개통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러·중·몽 등 유라시아 철도 운행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철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제공하여 수송률도 계속 높여나가는 등 국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철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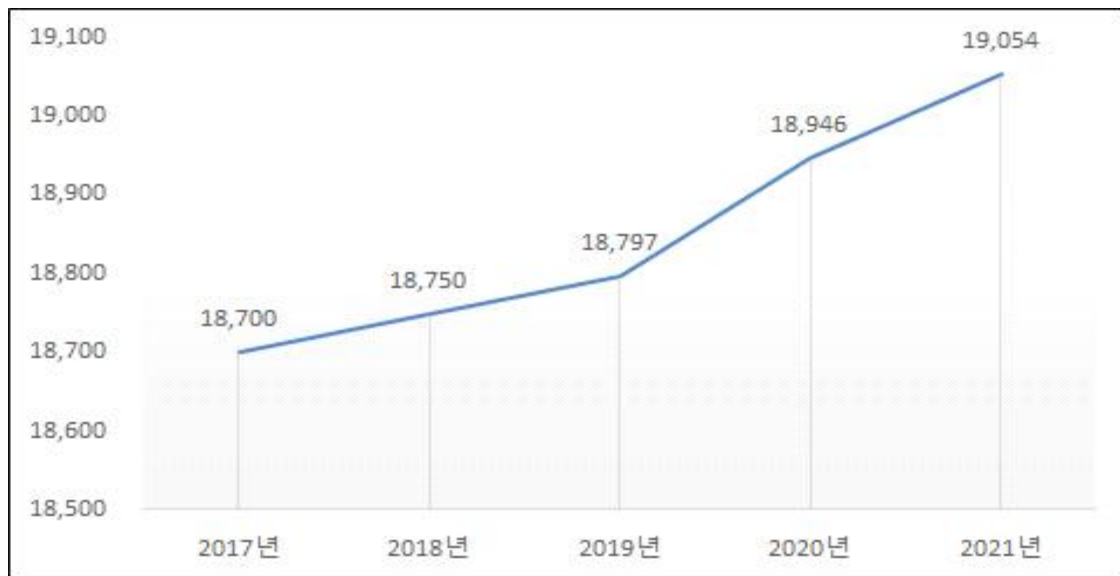
〈 도로 연장 〉

- 개념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선도로망(고속 및 일반국도)의 연장 증가 현황을 표현하는 지표
- 조사기관 : 전국 380여개 도로관리청의 도로 현황 통계 조사
- 조사대상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도로 현황
- 조사방법 : 도로 및 보수현황시스템(RSIS)을 통해 이듬해 1분기에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도로 현황 통계 수집
- 측정산식 : 도로관리청별 연장 현황을 합하여 계산

□ '21년 측정결과

- 2021년 간선도로(고속·일반국도) 예상 연장은 19,054km이며, 2020년 대비 0.57% 증가 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0.69%로 증가 추세입니다.
- 다만, '21년 측정결과는 '21년 신설구간 준공 연장만 포함하였으며, 선형 개량 등에 따라 연장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22년 5월에 확정됩니다.

< 간선도로 연장 추이(단위 : km) >



□ 성과분석

- 최근 5년간 간선도로망을 계속 확충하여 네트워크 효율화를 통해 지역 생활권 기반의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고속도로) '17년 4,717km → '21년 4,866km, (국도) '17년 13,983km → '21년 약 14,188km

- 고속도로는 봉담-송산 구간을 개통하였습니다.

- 봉담-송산* 민자고속도로는 경기 서남부지역의 동서 간 이동편의성을 개선하여 주행시간을 26분(44→18분), 주행거리를 8.3km(34.8→26.5km) 각각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봉담-송산) 왕복 4차로 신설, L=18.3km, 총 사업비 13,253억원, '17.04~'21.04

- 일반국도는 보령-태안, 지도-임자 등 22개 구간을 개통하였습니다.

- 보령-태안*은 충남 보령시(대천항)에서 태안군 안면도(영목항)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 해저터널로서 개통으로 주행거리 81km(95→14km), 주행시간 80분(90→10분) 단축되었으며, 서해안권 교통축의 획기적인 변화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됩니다.

* (보령-태안) 왕복 4차로 신설, L=7.98km, 총 사업비 4,881억원, '10.12~'21.12

- 또한, 전남 신안군 지도읍과 2개섬(수도, 임자도)을 해상교량으로 잇는 지도-임자 사업의 개통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의료, 치안 등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 (지도-임자) 왕복 2차로 신설, L=4.99km, 총 사업비 1,776억원, '13.10~'21.3

-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에서 관산동을 잇는 고양시 국도대체 우회도로(토당-원당-관산)를 신설하여 고양시 도심 교통 혼잡구간을 우회함으로서 통행시간을 20분(29분→9분) 이상 단축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국도의 간선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 (토당-원당-관산) 왕복 4차로 신설, L=9.34km, 총 사업비 2,200억원, '04.40~'21.12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14개)을 차질 없이 추진* 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 (착공) 농소-외동('21.4), 압해-화원('21.10), 화태-백야('21.10)

-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중장기 도로정책의 밑그림을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을 발표('21.9)하였습니다.

- 이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분야의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으로,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및 미래의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향후 정부 정책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 또한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을 30여년 만에 개편하여, 남북방향의 10개축과 동서방향의 10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주요 대도시 권역의 방사형 순환망으로 구성된 “10×10 + 6R²” 체계로 재정비하였으며,

- 특별히, 초광역권 내 교통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기존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에, 추가적으로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새롭게 보완하여 대도시권역의 도로망을 6개의 방사형 순환망(6R², 6 Radial Ring)으로 발전시켰습니다.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이 증가하는 휴가철과 명절 기간에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선별검사소 특별 운영('21.8~10월, 9개소), 특별방역대책 수립·시행('21.1~) 및 방역조치 이행상황 점검 강화(국무총리·장차관 6회, 특별점검 5회 등) 등을 통해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친환경도로 구축을 위해 과제 성과지표를 조기 달성*하고, 나아가 일반 국도(줄음선퍼) 확대를 위해 환경부와 MOU를 체결('21.10) 하였으며,

*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기 295기 구축, 수소차 충전소 14기 착수, 이용자수 100만명

- 디지털도로 전환을 위해 기존 성과지표인 휴게소·영업소 언택트 서비스*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디지털 도로관리 시스템(MS)의 자체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 휴게소·영업소 언택트 서비스 도입(166개소), 미납통행료 언택트 납부 도입(80개소) 등

** 인천광역시에 시스템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21.7)

- 사람중심도로 구현을 위해 고속도로 유희부지(582만m²)에 공원·체육 시설, 공영주차장, 귀농귀촌 학습장 등 지역주민 편의시설 조성·제공('21년 24개소), 공모를 통해 8개소의 스마트복합쉼터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고 수려한 디자인 반영 등 지역 랜드마크로 차별화('21.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행자·고령자 위주, 어린이·장애인 안전, 안전속도 5030 정착을 위한 도시지역도로 내용 등 설계지침 제정('21.3) 하였으며, 각종 정밀센서를 장착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점검 특수차량(TSCV)을 이용하여 주요 간선도로의 구조 및 상태를 정밀 측정·분석하여 미흡한 점 보완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구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도로시설의 유지관리체계 고도화의 일환으로 IoT 센서 등을 활용한 교량, 비탈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및 터널 내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원격 제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량 1,251개소(425억원) 및 비탈면 500개소(1,500억원) 상시계측시스템 구축('21~'25년)

** 일반국도 터널 859개소(1,182억원)에 화재발생에 대비한 원격제어체계 구축('20~'22년)

- 그리고, 도로교통법규 단속 장비를 확충*하여 안전한 도로주행을 유도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도로시설물은 지속 개선**하여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 안전띠 미착용 적발시스템 시범운영(고속도로 2개소)

화물차 적재불량 자동단속시스템 시범운영(고속도로 영업소 3개소)

** 위험도로 개선(30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56개소), 국도 보도설치(37개소), 횡단보도 조명 확충(1,066개소),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60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여객·화물 이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효율성 강화와 교통 혼잡 해소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간선도로망 적기 확충하겠습니다.

- 따라서, 간선도로 관련 건설계획 등을 통해 향후 5년간(2022~2026년) 간선도로를 1,535km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 (재정고속도로) 대구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고속도로 등 17개 사업(558.6km),
(민자고속도로) 이천-오산고속도로 등 4개 사업(174.4km),
(일반국도) 장수-장계, 삼장-산청 등 95개 사업(802.5)km

< 향후 5년간 연도별 간선도로 추가 확충 계획 >



< 연차별 고속·일반국도 개통계획 >

구 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재정고속	연장(km)	558.6	58.4	179.7	235.2	55.1	30.2
	사업	17건	대구순환 광주순환 동이-옥천 화도-양평 (조안-양평)	당진-천안 (아산-천안) 화도-양평 (화도-조안) 안성-구리 포항-영덕 강진-광주	함양-울산 파주-포천 새만금-전주 세종-안성	김포-파주 서창-안산 안산-북수원	양평-이천 문산-도라산
민자고속	연장(km)	174.4	31.2	28.7	114.5	-	-
	사업	4건	이천-오산	포천-화도	광명-서울 평택-익산 (1단계)	-	-
일반국도	연장(km)	802.5	143.0	260.1	158.7	139.9	100.8
	사업	95건	장수-장계 등 22건	삼장-산청 등 30건	단양-영월 등 15건	춘천-화천 등 19건	용진-우아 등 9건

□ 성과지표 개요

〈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

- 개념 : 수송, 보관 및 창고, 하역, 포장, 물류정보와 일반관리 등 물류서비스 활동에 따른 물류활동의 부가가치(value-added)와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여 물류활동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정도 파악
- 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조사대상 : 물류 수송, 보관 및 창고, 하역, 포장, 물류정보 등 국가물류비용
- 조사방법 : 국토교통통계연보(국토교통부), 운수업조사보고서(통계청), 기업경영 분석(한국은행),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분석(한국교통연구원) 등 각종 자료 확인
- 측정산식 : $\text{물류활동 부가가치} / \text{국내총생산(GDP)} \times 100\%$

□ '21년 측정결과

- 2021년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2024년에 산출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2018년 기준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국가물류 부가가치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3년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약 5월에 발표(2021년도에는 2018년도 실적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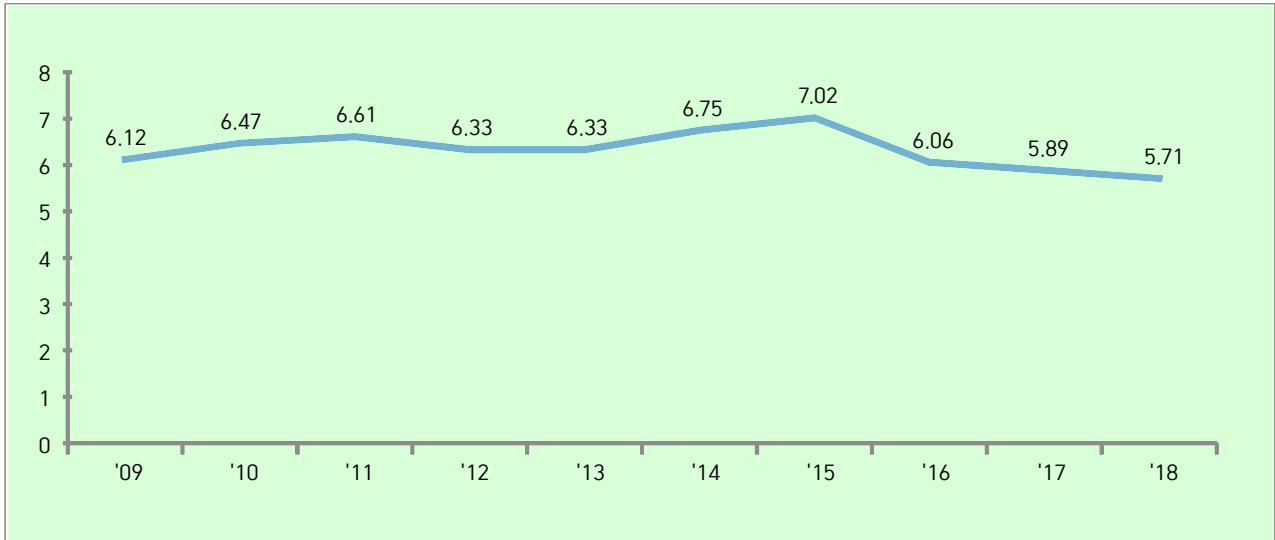
- 2018년도 물류활동 부가가치는 108,383십억원, 국내총생산(GDP)은 1,898,193십억원으로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5.71로 산정되었습니다.

-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국가물류 활동의 규모적 수준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가늠하는 척도로서,

- 물류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0년) '09년 6.12 → '10년 6.47 → '11년 6.61 → '12년 6.33 → '13년 6.33 → '14년 6.75 → '15년 7.02 → '16년 6.06 → '17년 5.89 → '18년 5.71

<연도별 국가물류부가가치 비중>



□ 성과분석

- '18년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5.71%**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이는 '16년 국적선사인 **한진해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상운송업의 매출이 전년대비 약 12% 급감한 여파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동안 물류활동 부가가치는 정체 또는 감소함에 따라 국가물류 부가가치가 낮게 산출
 - 다만, '19년 물류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만큼 '22년에 산정될 '19년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약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물류산업 매출액(조원, 통계청 운수업조사): ('16) 86.5 → ('17) 85.8 → ('18) 88.9 → ('19) 91.8
- 물류산업을 발전시키고 물류활동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0년 9월에 수립한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 특히, '19년도부터 생활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해관계자간 의견 조정, 공청회 등을 거쳐 '21년 1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 등 물류산업의 발전과 함께, 종사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던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화주, 사업자, 차주 간 협의를 거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결정('21.12.30), 위수탁제도와 다단계 관행의 부작용을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1년 7월에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의 스마트·디지털 혁신 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 최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추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활물류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 *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 : 2.4회('00년) → 53.8회('19년) → 65회('20년)
-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물류산업은 AI·IoT·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로지스틱스 4.0」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 반면, 우리 물류산업은 디지털 혁신 지체, 물류 인프라 부족, 경유 중심 고탄소 산업구조, 종사자 사회안전망 미흡 등의 문제로 산업 도약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6대 추진전략으로 스마트 물류 공유·연계 인프라, 사람중심 일자리, 지속가능물류,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를 마련했습니다.
 -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을 140조원으로 증대하고 물류 경쟁력지수를 25위에서 10위권으로 높이고, IT 활용지수는 39.6에서 66.1로, 물류 일자리를 97만명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 향후 추진계획

- '25년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지표('22년 기준)를 7.3%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물류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5년간 목표치 :

'21('18) 6.20 → '22('19) 6.40 → '23('20) 6.70 → '24('21) 7.00 → '25('22) 7.30

- 생활물류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위해 「생활물류산업 발전 기본 계획('22~'26)」을 마련하고, 소화물배달업 우수 사업자 인증 등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높아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 물류 업체 등에 공공에서 보유한 유휴부지 등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시범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첨단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 창고를 국가가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 * 로봇, 고속화물기 등 첨단설비 및 IoT, AI 운영·제어시스템을 통해 입고·보관·집하·포장 등 물류 쉼 과정이 효율화·자동화된 시설
- 신규기준 도시에 디지털 물류시스템 구현 및 물류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와 조화로운 디지털 물류체계를 구현하고, 도시물류 문제 해소 및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수소화물차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주요 물류거점을 선정하여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지급 등 환경친화적인 물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정책 수립 및 성과를 바탕으로 물류산업이 발전하고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지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과지표

④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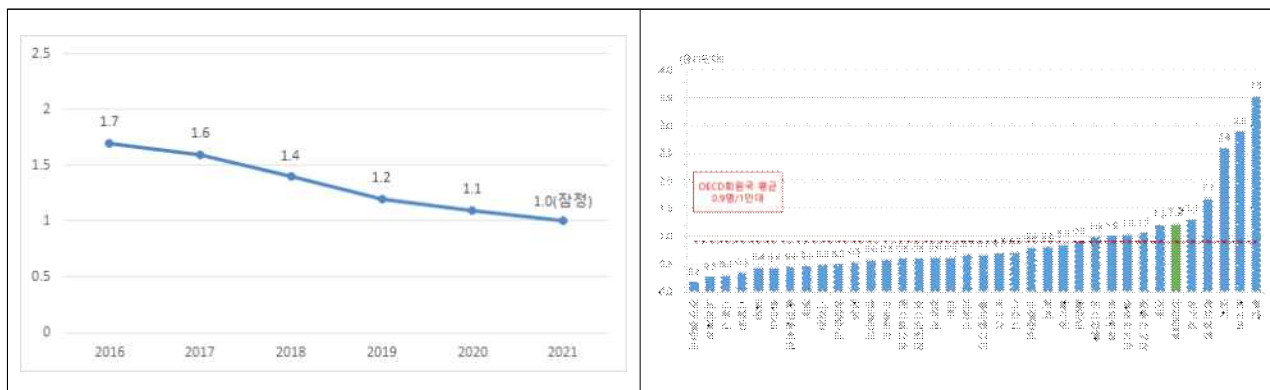
- 개념 :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 조사기관 : 경찰청 통계(교통사고) 및 국토부·농림부 등 통계(자동차·농기계)
- 조사대상 : 교통사고 인한 사망자,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 조사방법 : 경찰청 통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확인, 국토부(자동차)·농림부(농기계) 등 통계로 자동차 등록대수 확인
- 측정산식 :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자동차 등록대수) × 10,000

□ '21년 측정결과

-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교통 안전 지표로서, OECD 국가의 교통 관련 지표로 활용 중입니다.
-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기준으로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명(잠정)으로 예상되며,
 - * '21년 교통사고 확정통계는 '22.3월경에 산출 예정
- '16년 1.7명 → '18년 1.4명 → '20년 1.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국가 수준(0.9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OECD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19년 기준)>



□ 성과분석

- (성과) 국민의 교통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 기관 합동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1.3, 현조회의)을 수립하였고, 범부처 협업을 통한 전방위적 관리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 (‘19년) ’02년 이후 처음으로 2자리 감축률 달성 / (‘21년) 처음으로 2,000명대 진입

- (보행자 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중이 높은 보행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도시부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 중 보행사망자 1,09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5% 차지

- 도심부 제한속도를 50^{km/h}(보호구역 30^{km/h}) 하향하여 전국 시행(‘21.4.)하고, 차량의 주행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춰 보행자 등이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안전속도 5030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해 국민참여형 현장행사를 추진하고, 안전속도 5030 영상제작 및 TV·라디오·온라인 등을 통하여 속도하향 정책의 이해도 및 국민의 수용성도 높이하고자 하였습니다.
- (화물차 안전)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 위험이 큰 화물차에 대해 의무 휴게시간 기준을 강화*(‘21.3)하고, 상시 현장 단속 전담인력 활용을 위한 근거(교통안전법·화물차법 개정, ‘21.7)를 마련하였습니다.

* (종전)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 (변경)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 (버스·택시 등 안전) 버스·택시 등 위험 운전자에 대해 업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코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여객법 개정, ‘21.7) 하고, 렌터카 명의 대여 시 처벌(1년 이하 징역 등, ‘21.1)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륜차 안전)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이륜차에 대해 배달 이륜차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생물법, ‘21.7)하고, 공익제보단을 확대(‘20년 2천명 → ‘21년 5천명)하여 신호위반·인도주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 생물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업체 중 종사자 근무환경 및 안전조치 개선 등 평가

□ 향후 추진계획

- (목표) '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2,000명 수준)으로 줄여 교통 안전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대책 마련) 보행자, 이륜차, 어린이 및 고령자 등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22년交通安全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보행자 안전)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해, 차량·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는 도로에 대해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부여(경찰청 등 협조)하여 도로의 전 부분을 보행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 (운전자·차량·시설) '교통사고 위험지역'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차량운행 금지 등을 제한하며,
 - 국도 제한속도 하향(마을주민 보호구간, 10~20km/h[↓]), 횡단보도 조명 시설 및 미끄럼 방지포장('22년 60개소)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륜차 안전) 배달문화 일상화에 따라, 종사자 권익·안전 제고를 위해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현장 안착하고 공제조합 설립 등을 추진하며,
- (교통안전 홍보)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등 교통량·보행량 증가에 대응하여 유관기관 합동 온·오프라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 * 공중파 방송, 라디오, 신문, 옥외 전광판 및 현장 캠페인, SNS 및 유튜브 등 활용
 - 특히, 보행자 및 화물차·이륜차 등 타겟별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 대상별·시기별로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 5)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성과지표

①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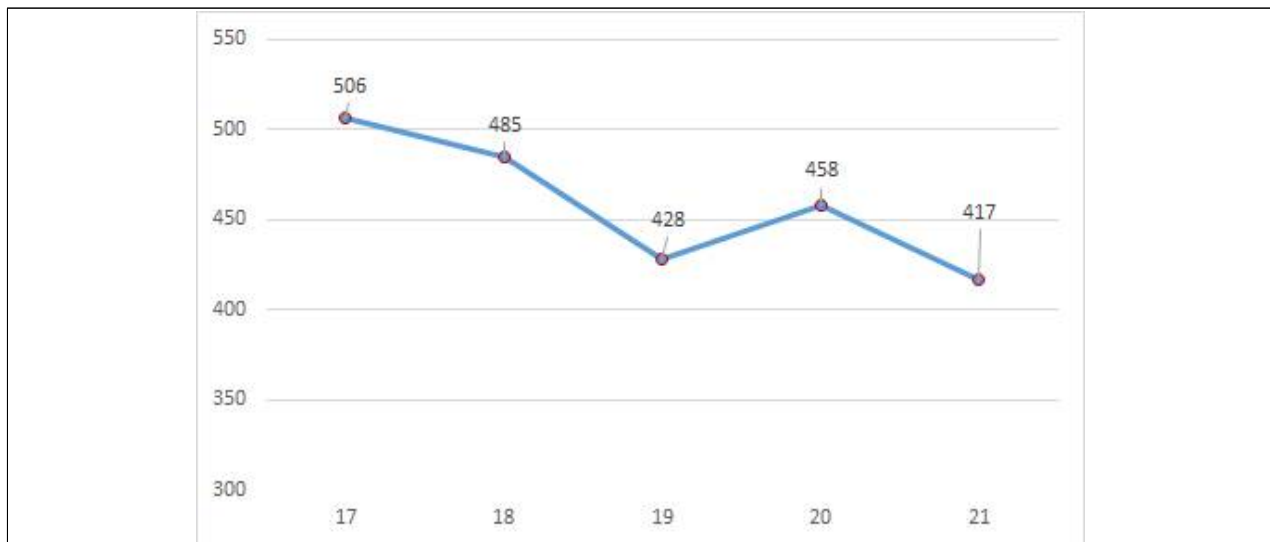
- 개념 : 산업재해 통계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 조사기관 : 고용노동부
- 조사대상 : 산업재해 신고대상 업종 중 건설업
-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로 사고사망자 수 확인
- 측정산식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승인 통계자료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 합산

□ '21년 측정결과

- '21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명 감소, 9% 감소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17년 이후 감소추세를 유지하다 20년에는 이천화재(38명 사망) 등으로 다소 증가
'17. 506명 → '18. 485명 → '19. 428명 → '20. 458명 → '21. 417

<'17년 이후 건설업 사고사망자 추이>



□ 성과분석

-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마련에 힘써왔습니다.

* (주요내용) 적정공기·비용제공 의무화 등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임을 부여**

- '20.9월 최초발의 이후, 업계·관계부처 **이견 조율**을 통해 **근로자 재해보험 의무화** 등 입법보완을 거쳐 **재발의**하였습니다.(6.16)

* 건설업계 간담회('20.10~'21.6) / 고용부 등과 건설안전특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간 중복사항 수정 조율('21.1~'21.6)을 통해 합의안 마련

- 안전역량이 곧 경쟁력인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고강도 점검 등 체감되는 현장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였습니다.

* 「건설안전 강화대책」('21.3.2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또한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건설사고 사망자 감소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인 건설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현장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방안」('21.10.12, 보도자료 배포)

- 한편, 5개 지방 국토관리청과 산하기관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계절**(해빙기·우기·동절기) **정기점검** 및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특별점검** 등을 연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에는 소규모 취약현장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고위험 현장은 **고강도 불시점검**(지방청 점검의 약 40%)을 실시하였습니다.

* (점검대상) '20년 2,700개 → '21년 15,500개(11월 기준 15,000개 소 점검 완료)

- 또한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계 하도급사 명단을 분기마다 공개하고 특별점검(659개소)을 실시하였습니다.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안전수칙 미준수=대형사고”라는 메시지를 방송사 TV 광고, 유튜브 UCC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 (TV) 610여회 송출(KBS, MBC, YTN 등)/(유튜브) 510만여회 조회/(고속열차) 406만여회 송출

- 더불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정리 등 기본부터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의 **건설안전 슬로건***을 선정하고 확산하였습니다.

* 건설안전 슬로건(“안전 베테랑은 현장 정리부터”) 선포식(6.24), 건설현장 폭염 점검(장관, 7.27) 등으로 업계 경영진, 산하·소속기관에 사고감축 정책의지 전파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고에 취약한 **중·소건설사**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추진**(’21년 24社)하였으며, **사고사례를 공유***하여 현장 경각심도 제고하였습니다.

* 사고사례 영상(3D) 등 안전컨텐츠 마련 → SNS·카드뉴스, 웨비나 등으로 확산 추진

- 누구나 위험현장을 신고할 수 있는 **아차사고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력정보를 간소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유튜브 홍보(5, 10월), 우수 신고자 포상(매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그간 안전대책의 현장이행을 보다 강화하고, 안전이 후순위이던 건설 현장 안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 광주 화정 붕괴사고(’22.1.11)를 계기로 긴급 안전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안전강화 대책 마련으로 건설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 전국 1억원 이상 건설 공사현장 총 45,729개소 중 65%인 29,793개소 (민간 25,484개소, 공공 4,309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 그 중에서 금번 광주사고와 유사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층 건축현장 1,105개소는 집중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금번 광주사고의 원인 규명을 운영중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와 자체 진단을 토대로 건설공사 계약부터 시공상 안전·품질 관리 전반에 걸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현재 소위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건설업 특성에 맞게 모든 건설참여 주체별 안전책무를 부여하고
- 산업 내 사고대가가 안전투자 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업계 전반에 확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